

FIS 한국재정정보원
(04637)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
Tel. 02-6908-8200 Fax 02-2288-6200 www.fis.kr

9 772508 897000 06
ISSN 2508-8971

월간

나라재정

FISCAL INFORMATION BULLETIN

6

재정 INSIGHT
통계로 보는 재정전략회의 주요의제
재정 칼럼

재정 NOW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해외재정동향

재정 STORY
현실 속 재정제도 이야기
재정, 그땐 그랬지



2024 June
Vol.90

FIS 한국재정정보원

보리를 베고 논에 모를 심는다는
망종(芒種)은 여름의 시작을 알립니다.
올여름 무더위와 긴 장마가 예고 되었지만,
초여름의 기운은 에너지가 넘칩니다.
당신의 싱그러운 6월을 바라봅니다.

CONTENTS







재정 INSIGHT

04 통계로 보는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요의제

08 재정 칼럼

다차원적 접근을 통한 저출생 정책의 효과성 제고
-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합리성과 정치성 관점에서 바라본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 방향
- 정호용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희망사다리 강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발전 방안
- 이 영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전) 교육부 차관

재정 NOW

24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26 해외재정동향

주요국 및 국제기구 재정동향

재정 STORY

34 현실 속 재정제도 이야기

사회후생의 기준: 칼도-힉스 기준에 대하여
- 옥동석 인천대학교 명예교수, 전) 조세재정연구원장

42 재정, 그땐 그랬지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이후 시기 재정 정책의 전개와 역사적 시사점(1)
- 우명동 성신여자대학교 명예교수

54 일상 속 경제·재정 이야기

특정 영화의 스크린 독점, 이것도 독점일까?
- 남시훈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58 문화로 보는 재정 이야기

60 재정 캘린더

62 애독자 코너

월간 나라재정
2024 JUNE VOL. 90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주소** (04637)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
전화 02-6908-8200 **팩스** 02-2288-6200 **홈페이지** www.fis.kr
발행인 박용주 한국재정정보원장 **문의** 재정정보분석센터 | 02-6908-8559

통계로 보는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요의제

정부는 지난 5월 17일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내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전체 국무위원들이 모여 향후 5년간의 국가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2004년부터 매년 개최하여 이번 회의는 21번째이다. 정부는 이러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논의 내용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 및 중기에 해당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한다.

이번 회의에서 대통령은 건전재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비효율적인 예산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동시에 민생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전략에 대해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중기 계획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 초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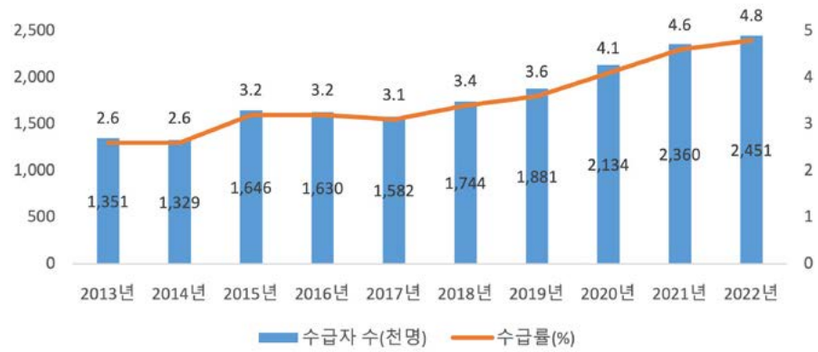
이러한 재정 운용 기조 하에서 민생안정, 역동경제, 재정혁신 등을 주제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다. 기획재정부는 민생안정을 위한 핵심과제로 약자복지 강화 및 의료개혁 추진, 청년의 미래 도약 지원, 지역 교통 격차 해소를 언급했고, 역동경제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으로는 R&D와 반도체 산업 지원 등을 강조했다. 또한 저출생 대응 지원과 지방교육 재정 혁신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년 기준 R&D 예산과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 교육 분야 예산은 각각 26.5조원, 262.5조원, 89.8조원에 달한다.

이러한 정책과제는 양극화 가속화와 차세대 경제 성장동력 약화, 출생률 저하 등 사회적 과제 심화를 반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약자복지 지표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 기준 약 250만 명에 달한다. 또한 전국민 대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의 비율인 수급률 또한 2013년 2.6%에서 2022년 4.8%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향후에도 약자복지에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임을 시사한다.

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혁신 노력의 정도를 보여주는 연구개발투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3년 59.3조원이었던 연구개발투자 규모는 2022년에 112.6조원까지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런데 재원별로 살펴보면 이 중 공공재원의 투자 비중은 2022년 기준 23.4%(26.3조원)로 민간재원(76.3%) 규모와 비교하면 약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즉, 아직 공공보다는 민간 부문 주도로 기술혁신을 위한 투자를 이끌어가고 있으며, 공공부문에서도 적극적인 투자가 지속적으로 요구됨을 의미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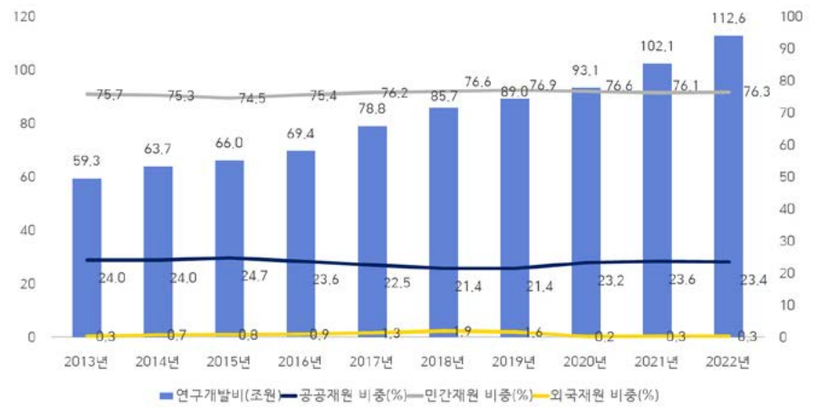
(단위: 천명, %)



주: 수급률은 전국민 대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와의 비율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재원별 연구개발비〉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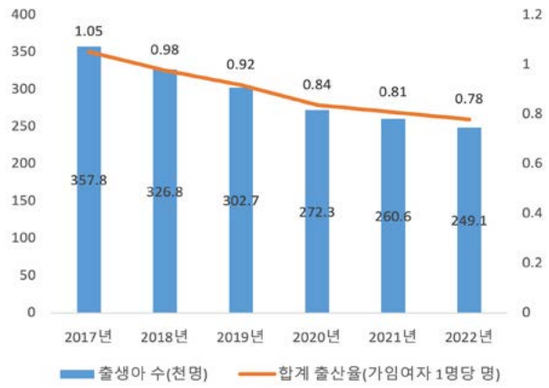


주: 공공재원은 국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자체 연구기관, 기타 비영리 민간연구기관,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 의료기관에서 부담한 연구개발비
자료: 과학기술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도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연간 출생아 수는 2017년 약 35만 7,800명에서 2022년 24만 9,100천 명까지 5년만에 약 30%가 감소하였고, 합계 출산율도 2017년 1.05명에서 2022년 0.78명으로 약 26%가 감소하였다. 청년 고용동향의 경우, 청년 실업률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보이나 경제활동인구나 경제활동참가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에도 경제활동인구가 점차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했다.

〈합계 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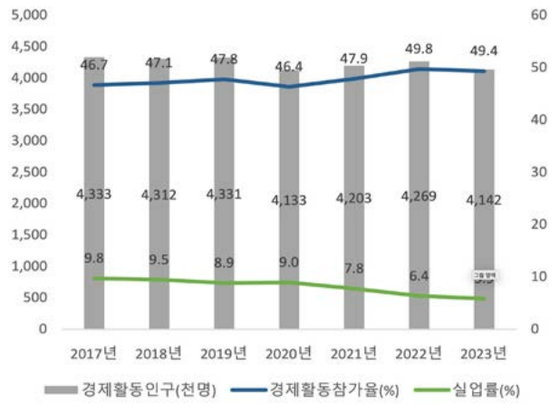
(단위: 천명, %)



주: 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
자료: 통계청 2022년 출생통계(확정)

〈청년 고용동향〉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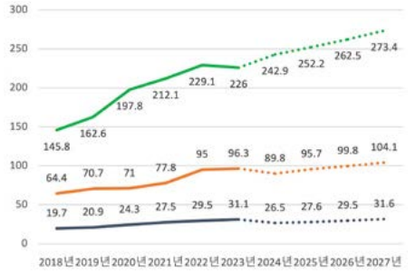
주: 청년층은 15~29세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위 정책과제와 관련된 주요 분야의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지출 규모는 2024년 예산 기준 242.9조원이며 2023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27년에는 규모가 270조원을 초과할 전망이다. R&D 분야 지출 규모는 2024년 26.5조원으로 중기간 큰 변동은 없으나,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이 논의된만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발표될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 분야 규모는 2024년 89.8조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7조원 가량 감소하였다. 하지만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27년에는 100조원을 초과할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내년도 예산안과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적극 반영되어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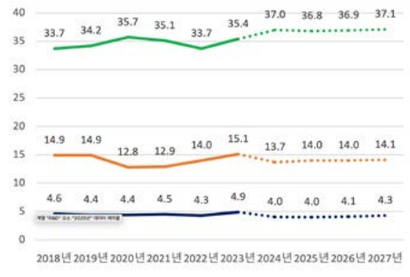
지출 규모

(단위: 조원)



총지출 대비 비중

(단위: 조원)



보건·복지·고용 교육 R&D

주: 12대 분야 기준으로 2024년까지 예산,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전망 수치
자료: 기획재정부 연도별 나라살림 예산개요, 국가재정운용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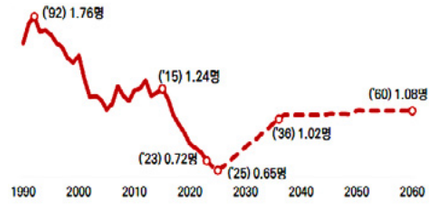
다차원적 접근을 통한 저출생 정책의 효과성 제고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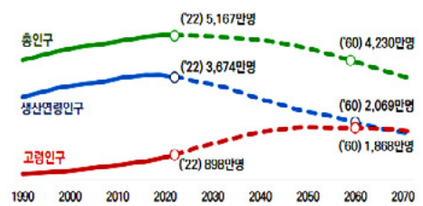
우리나라가 인구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2015년 이후 출산율이 급락하여 2023년에는 0.72명에 머물렀는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생산연령 인구는 2020년에, 총인구는 2021년에 감소세로 전환하였다. 인구구조에 있어서는 2025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여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을 전망이다.

〈합계출산율 추이 및 전망〉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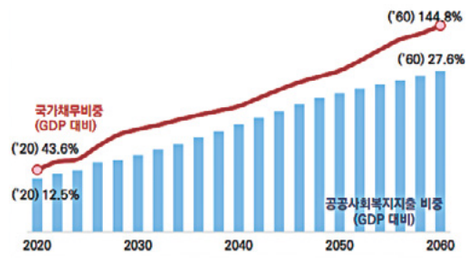
〈인구 추이 및 전망〉



자료: 통계청

이러한 인구변화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로 인해 저축률이 하락하고 노동생산성도 감소할 수 있다. 고령층의 저축률과 노동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또 인구감소로 인해 경제 내 발명, 발견 등 혁신활동을 수행할 사람들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러한 혁신활동은 일종의 외부효과를 갖기 때문에 혁신활동의 위축은 성장률의 둔화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 재정의 관점에서는 공적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건강보험 지출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역적 관점에서는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이 맞물려 지역소멸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채무 및 공공사회복지지출 전망〉



자료: KDI('23), 사회보장 재정추계('20)

〈지역소멸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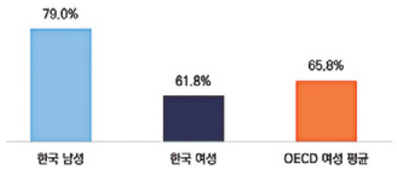
자료: 감사원('21), 「감사보고서:인구구조 변화 대응실태」

출산율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그 효과는 불분명하며, 적어도 지금까지는 출산율 하락을 막지 못하였다. 따라서 기존 정책과는 다른 보다 다차원적인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즉, 지금까지 출산율 제고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면 앞으로는 이

에 더해 경제활동인구를 확충하고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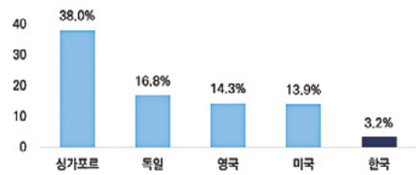
먼저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임으로써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국가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022년을 기준으로 할 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OECD 평균과 같다면 15~64세의 경제활동 인구는 72만명 증가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인구 중 외국인의 비중도 낮은 편이다. 특히 전문인력의 활용이 미흡한 상황인데, 만일 외국인 비중이 1%포인트 늘어난다면 경제활동 인구는 33만명 증가하게 된다.

〈15~64세 경활률 비교('22)〉



자료: 통계청, OECD

〈주요국 외국인 비중 비교('22, %)〉



자료: 통계청, OECD 등

다음으로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성장률을 제고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노동 부족을 자본 및 기술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관건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경제·사회 변화를 우리가 얼마나 잘 따라갈 것인가에 있다. 현재 상황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글로벌 유니콘 중 절반 이상은 국내 규제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거나 제한적으로만 영위할 수 있다. 또 고부가가치 서비스인 전문직 서비스의 경우 국내 규제가 강해 온라인 기반의 서비스 제공이나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중개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00대 유니콘의 국내 사업 영위 가능성〉



자료: 아산나눔재단, 「스타트업코리아!: 2022 정책제안 발표회」.

우리나라는 건국 당시 농업이 중심이었으나 이후 빠르게 경공업 중심으로 전환하였고 그 다음에는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전환하여 생산성을 높여 왔다. 이때까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화 관련 해외 및 국내 규제동향 비교〉

	의료		법률	세무
	광고	원격의료		
해외	중국은 의료광고 심의를 정부가 담당하나 큰 문제없음. 미국, 유럽, 일본은 의료광고 플랫폼에 대한 규제 없음.	G7과 OECD 32개국이 원격의료 허용	해외 주요국에서 변호사의 인터넷 광고를 허용	일본, 한국 등 소수 국가만 유자격자에 독점적 권한 부여
국내	영리목적의 의료기관 소개 금지, 의료광고에 대한 포괄적 금지	원격의료 금지	변협의 적극적 문제제기, 회원 변호사 징계규정 마련	세무사법은 세무사에 배타적 독점권 부여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KISDI,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최종보고회」, 2021.12.

지는 경제 규제나 사회 규제가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제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어야 할 시점에는 여러 규제가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앞으로 생산성 제고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활동 인구를 확충하고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저출산 관련 재정·세제 지원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저출산의 원인 및 정책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실효성 높은 사업을 선택해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 분석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업의 확대나 신설을 지양하고, 효과성이 입증되더라도 사업의 확대나 신설은 절감재원으로 추진하는 원칙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금성 재정·세제 지원(예: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자녀장려세제, 자녀세액공제, 출산·입양세액공제)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폐합하고 지급방식도 월 단위 또는 연 단위에서 하나의 방식으로 통일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수혜자가 필요에 따라 융통성 있게 사용할 여지를 넓히고 정책체감도도 높이자는 것이다.

둘째, 일·가정 양립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한편, 유아휴직이 장기화되면 오히려 경력단절의 위험과 노동시장 이탈의 위험이 커지는 점을 감안해 육아휴직 조기복귀 옵션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기간은 최대 21개월에 달하나 OECD 평균은 1년 정도이다. 조기복귀 옵션의 예로서 노르웨이에서는 100%의 급여를 49주 동안 받는 플랜과 80%의 급여를 59주 동안 받는 플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돌봄체계의 효율화도 필요하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경우에는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돌봄 시간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초등돌봄의 경

우에는 늘봄학교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돌봄사업(예: 여성가족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사업 및 지역아동센터)을 연계 및 통합하는 방안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가정의 경우에는 외국인·고령자 등 돌봄인력 공급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외국인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전문인력과 비전문인력으로 구분할 때, 전문인력의 경우에는 적극적 이민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에 이들이 정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특히 첨단분야 우수인재와 글로벌 명문대 졸업생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호주에서는 특정 산업(첨단제조, 우주 등) 인재에게 조건 없이 6주내 온 가족에게 영주권을 발급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글로벌 최상위 50개 대학 졸업생들이 2~3년 거주하면서 첨단산업 분야에서 취업활동을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비전문인력의 경우에는 전문인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업종별 및 지역별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 비전문인력을 다시 유학생, 숙련 또는 준숙련 인력, 저숙련 인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유학생의 경우에는 외국인재 유입형 ODA 사업(장학금)을 추진함으로써 개도국 유학생을 국내에 유치하고 취업과 연계시켜 우리 경제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숙련 또는 준숙련 인력의 경우에는 장기·성실 근속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저숙련 인력의 경우에는 국내 체류자(결혼 이민자의 가족이나 유학생 등)가 가사·돌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지역특화비자 발급대상을 인구감소지역에서 기회발전특구로 확대하는 방안, 인력부족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허가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넷째,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미래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먼저 초등 및 중등 교육의 경우에는 늘봄학교를 통해 초등학생 성장·발달 맞춤형 종합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한다. 방학 포함 1년 내내 모든 초등생에게 늘봄 프로그램 등 관련 비용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늘봄지원실 기반의 늘봄학교 전담 조직 및 인력체계를 구축하며, 일반교과(국·영·수 등) 보충·심화 프로그램과 예체능 등 수요 높은 프로그램을 전학년 특성에 맞게 제공한다. 또한 디지털 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AIDT)을 도입하고 교사의 역할도 미래형(teaching→coaching)으로 전환한다. 교육발전특구에 대해서는 지역 상황에 적합한 규제특례를 허용하여 지역의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혁신노력을 지원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고등교육의 경우에는 재정지원 관련 교육부 권한을 단계적으로 지자체에 위임 및 이양하고, 지자체의 고등교육 정책역량을 강화하며, 대학 구조개혁을 지원하도록 한다.

다섯째,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중앙 주도의 획일적인 발전정책에서 벗어나, 권역별 거점을 중심으로 지방 주도의 다양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3 초광역 발전전략'의 성과 및 모범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지자체 간 합의이행 유인을 제공한다. 또 중복·난립되어 있는 특구(70여종, 900여 지역)를 정비 및 효율화하고, 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글로컬 대학 간의 연계와 시너지를 강화하도록 한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회계·기금 간 체계적 역할분담 및 연계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한시적 규제유예 및 규제 샌드박스 적용분야와 적용기간을 우대하고, 이주·투자기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체계 구축도 검토한다. 무엇보다도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계 개편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중소기업 혁신도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가 매우 큰 상황이다.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제조 혁신을 지원하고, R&D 투자 및 인재양성을 촉진하도록 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규모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금처럼 중소기업 졸업 시에 규제는 급증하고 지원은 급감하는 구조를 개선하도록 한다. 규제 숫자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57개인 데 반해 중견기업은 183개, 대기업은 342개에 달한다. 이를 점진구조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규모(매출액, 자산 등)에 따른 일률적 지원 기준을 개편해 성장성 지표(예: 3개년 평균 매출증가율)를 추가하거나,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정책금융을 확대하며 성숙기 기업은 민간금융이 담당하도록 한다.

일곱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근로유인을 제고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근로유인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관련 제도(예: 기초생활보장제도, 실업급여, 근로장려세제)를 개선하도록 한다.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 노동, 교육, 중소기업, 균형발전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구조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주로 재정·세제 지원의 관점에서 인구위기의 문제를 바라보았다면 앞으로는 보다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또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저출산 정책이 전환되기를 기대한다.

합리성과 정치성 관점에서 바라본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 방향

정호용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지난 5월 17일 개최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성장의 토대가 되는 연구개발(R&D) 분야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면 폐지하고 R&D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 1년 전 6월 28일에 개최된 같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던 것을 생각하면 윤 대통령과 정부가 R&D를 대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세간에서 평가하듯 불과 1년 만에 대통령과 정부가 말을 바꿨다고 무작정 비판하기는 곤란하다. 정책은 시의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법이고, 그간 R&D 정책 환경이 바뀌어서 정책 방향이 변화했다고 말할 요소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 가령 R&D 예산 감소로 연구자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었고, 국가경쟁력 추락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었으며,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통령과 정부의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발표가 어느 정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우리가 잊을 만할 때쯤 다시 부상하여 논의되는 예비타당성조사가 도대체 무엇인가?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이다. 예비타당성조사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국가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시행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예비타당성조사는 기본적으로 대규모 국가사업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려고 설계된 재정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된 공공사업을 합리성의 시각에서만 분석하고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에서 우리가 쉽게 접하는 비판은 대체로 합리성보다는 정치성의 차원에서 제기되고, 합리성은 좋은 것이고 정치성은 나쁜 것이라는 이분법에 쉽게 빠지고는 한다.

그러나 오래전 Downs(1957)와 Wildavsky(1964)가 지적하듯 예산 과정과 재정 제도는 근본적으로 정치적 속성을 갖는다. 의사결정에서 합리성을 중요한 한 축으로 삼는 예비타당성조사도 이러한 특징에서 예외가 되지 못한다. 이미 예비타당성조사는 지역 균형 발전 등의 정치적 가치를 포섭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심지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합리성의 요소로 이해되고 있는 비용편익분석 자체도 완전히 가치중립적이지는 못하다. 공공부문의 비용편익분석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공투자사업으로 인한 후생의 증감을 비용과 편익이라는 화폐가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개인 수준에서 측정된 화폐가치를 사회 수준으로 집계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회철학과 주관적 가치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정책과 제도가 영구불변일 수 없으며 정치적 상황 및 사회의 요구에 맞춰 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정치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Stone(1997) 등이 지적하듯 맥락과 해석을 중시하는 숙의적, 구성주의적 정책분석이 합리적 정책분석에 대한 회의를 유발하기도 했고, 합리성과 경제성의 가치 속에 도입된 정책분석 및 평가가 실제 정책에 미친 효과가 미미하다는 주장은 여전히 유효한 부분이 있다.



물론 최소한의 합리성과 경제성을 확보하고자 고안된 재정 제도가 재정전문가들의 우려를 자아낼 만큼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실제 그 역할과 기능이 유명무실해진다면 이는 재고해보아야 할 것이다. 정치적인 예산 과정과 재정 제도에 합리성과 경제성이라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사실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시각에서 재정 사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재정효과성과 재정민주주의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라는 소식에 마주하여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예비타당성조사가 합리성과 정치성을 균형 있게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서 합리성과 정치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개선이 요청된다. 김봉환·정호용·최근혁(2024)은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서 경제성, 정책성,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규모 국가사업의 실시 여부를 판단하는 시행단계보다는 애초에 해당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하는 면제단계에서 정치성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정치성이 작동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자체에서 면제된 대규모 국가사업은 최소한의 합리성 판단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일단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사업이라면 최소한의 경제성 판단을 거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이후 설령 경제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일지라도 대통령과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사업의 시행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도를 개선하게 되면 정치성이 합리성을 과잉 압도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경제성 판단 축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성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반되는 정치적 책임의 소재를 확실히 할 수 있으므로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에도 도움이 된다. 만약 이러한 개선이 어느 이유에서든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차선책으로서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절차를 유지하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국가사업도 사후적으로나마 타당성조사에 준하는 경제성 판단을 거치는 단계를 추가하여 면제사업의 경제적 합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겨두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것은 재정 사업의 합리성에 너무도 큰 공백을 만드는 일이다. 그보다는 'R&D 예비타당성조사 전면 적용 및 R&D 사업 일괄 수행'이 재정의 합리성과 정치성을 동시에 담보하는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참고문헌

Downs, A.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Harper and Row, 28.

Stone, D. A. (1997). Policy Paradox: The Art of Political Decision Making, Revised Edition, New York, W.W. Norton.

WILDAVSKY, A. (1964). The Politics of the Bubgetary Process. Little Brown & Co.

김봉환·정호용·최근혁(2024),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치성 연구: 어느 과정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재정학연구, 17(2).

희망사다리 강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발전 방안

이영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전) 교육부 차관



1. 서론

누구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자신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구축하는 것은 사회의 통합을 유지하고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고등교육 기회형평성의 보장으로 고등교육은 세대 간 사회적 이동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소득분배도 개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009년경 시작된 '반값등록금' 논쟁에서 대학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명목등록금을 절반으로 일률적으로 낮추자는 주장과 학생의 가계소득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하자는 주장이 맞서 논쟁이 벌어지다가 다행히도 맞춤형 지원 제도인 국가장학금 제도가 2012년 도입되었다. 이후 국가장학금 제도의 규모와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우리나라 고등교육 기회형평성 제고를 위한 핵심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2024년 5월 17일 개최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장학금을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밝혔다.

우리나라의 높은 대학 진학률과 대학 졸업률은 국가장학금 제도가 저소득 가계 자녀의 학비 감면을 통해 대학교육 기회를 제고하는 본연의 성과를 일정 정도 달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가장학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긍정적이며, 정치권은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국가장학금 제도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장학금이 단순히 양적인 측면을 넘어 질적인 측면에서도 기회형평성 보장에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분석하여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대학 진학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선호되는 학과와 대학에 저소득가계 자녀들이 진학함에 있어서의 장애물을 국가장학금제도가 해소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국가장학금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학별 재학생 평균 가계소득을 산정하여 비교하면 사회적으로 선호되는 대학(예를 들면 수도권 소위 '명문' 대학이나 국립 대학)이나 선호되는 학과(예를 들어, 의학과)에 고소득 가계 자녀가 보다 많이 재학하고 있는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고소득 가계 자녀들이 재학하는 학교와 저소득 가계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가 분리(segregation)되어 대학이 학생 가계소득에 따른 계층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 사회적 이동성은 대학 교육을 통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 미국 대학 재학생들을 분석한 연구(Chetty 외, 2020, QJE)에 따르면, 미국 최상위 엘리트 대학의 경우 상위 1% 가계의 학생 비율이 14.5%로, 하위 50% 가계의 학생 비율인 13.5%보다 높아 미국 대학의 가계소득에 따른 계층화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가장학금의 사회이동성 제고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가장학금이 대학의 계층화를 완화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에 덧붙여, 국가장학금이 지원 학생의 학업 성과를 높이고 졸업후 노동시장 성과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국가장학금의 대학 계층화, 학업 성과, 노동시장 성과, 사회경제적 속성에 대한 영향 등을 엄밀히 분석하여 증거 기반으로 국가장학금 제도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국가장학금 제도를 평가하는 또 하나의 잣대는 국가장학금이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는가이다. 물론 국가장학금의 본연의 목적은 '희망사다리 강화'에 있으며, '지역인재 양성'은 부수적인 목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지역불균형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임을 감안하여, 국가장학금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효과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장학금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2. 맞춤형 국가장학금 현황

국가장학금은 2012년 1.75조원 규모로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24년 현재 4.7조원 규모의 장학금이 지원되고 있다. 이러한 맞춤형 국가장학금의 근거 법령은 교육기본법 제 28조로 "국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 등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는 데 있다.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5조에도 명기되어 있는데, "국가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표1〉 2024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의 주요 내용

구분			목적	지원 대상	2024년 예산
국가장학금	I 유형		저소득·중산층 부담 경감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 대학생	2조 6,599억 원
	다자녀장학금		다자녀 가정 부담 경감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 형제 자매가 셋 이상인 대학생	1조 56억 원
	II 유형	대학 자체노력 연계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 연계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 자체 노력 수행 대학 학생	3,500억 원
		지역인재 장학금	지역대학 육성 지역인재 지원	지역고교 졸업 후 지역대학 진학 학생	800억 원
근로장학금	국가근로장학사업		안정적 학업 여건 조성, 근로 기회 제공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 근로 희망 대학생	4,518억 원
우수장학금	인문100년 장학금		인문·사회 분야 우수 인재 육성	인문·사회계열을 전공하는 우수 대학생	309억 원
	예술체육비전 장학금		예술·체육 분야 우수 인재 육성	예술·체육계열을 전공하는 우수 대학생	113억 원
	드림장학금		저소득층 우수 고교생 글로벌 인재로 성장 지원	해외 유학을 희망하는 기초·차상위 고교생(고2~)	60억 원

출처: 2024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표 1〉은 국가장학금과 함께 근로장학금, 우수장학금 사업의 내용과 예산을 함께 정리하였다. 국가장학금의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저소득 및 중산층 부담 경감을 위한 유형 I 지원과 대학의 자체 노력 수행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대학에 지원하는 유형 II에 덧붙여, 다자녀와 지역인재에 대한 추가적인 장학금 사업이 있다. 근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도 꾸준히 증가하여, 4,500억원의 근로장학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문사회 및 예체능 분야의 우수 장학금 사업도 시행되고 있다[1].

1) 위의 〈표 1〉에는 인문사회 예체능 우수 장학금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공계 우수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은 국가우수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사업을 통해 추가로 이루어지고 있다.

3. 개선 방안

국가장학금이 희망사다리로 더욱 잘 작동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는 기제로 역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5가지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1) 기회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단가의 상향 조정

현재의 국가장학금 유형 I의 지원 단가는 〈표 2〉에 정리되어 있는데, 등록금 전액에 대한 지원은 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차상위가구의 학생들에게만 이루어지고 있다. 전액 다음으로 가장 큰 지원액수로 설정되어 있는 1, 2, 3 구간의 지원액은 570만원으로 우리나라 대학의 평균 등록금 680만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들 1~3구간 가계 자녀에 대한 학기별 최대 지원 금액을 등록금 전액으로 높이고 이후 구간 가계 자녀에 대한 지원단가도 상향 조정하여 학업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표2〉 2024년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연간 최대지원금액
I 유형	기초/차상위	전액.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1구간	285만원	570만원
	2구간	285만원	570만원
	3구간	285만원	570만원
	4구간	210만원	420만원
	5구간	210만원	420만원
	6구간	210만원	420만원
	7구간	175만원	350만원
	8구간	175만원	350만원

출처: 한국장학재단

(2) 초중등 단계에서 국가장학금 대상자 조기 지정

매년 4조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하고 있는 국가장학금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가계소득에 따른 계층화 현상이 강하게 존재함은 대학 입학 이후에나 지원대상이 명확해 지는 현재의 국가장학금 제도 운영 방식만으로는 기회형평성을 강하게 보장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보다 일찍, 초중고

단계에서 학교에서 저소득가계 자녀에게 미리 국가장학금 전액 지원을 약속하는 "지역 연계 학교-교육청 선정 국가장학금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국가장학금을 받아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초중고 단계에서 명확하게 하는 것은 저소득 가계 학생들에게 희망사다리의 존재를 보다 명확할 수 있다. 덧붙여 초중고 선생님, 교장선생님, 교육감은 "지역 연계 학교-교육청 선정 국가장학금 제도"를 학생들의 학업 의욕 고취를 위해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초중고 단계에서의 이러한 국가장학금 대상자 조기 선정 제도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운영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는 요소로도 작동할 수 있다. 교육세를 재원으로 마련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대해서 초중고 교육계와 교육청은 초중고 지원을 위한 재정이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반감을 보인다. 대상자 선정이 교육적 목적하에서 초중고 단계에서 미리 이루어지는 경우 지원 대상이 대학생일지라도 이러한 반감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지역의 참여 확대와 국가장학금을 통한 지역인재 선순환 체제 마련

앞의 (2)번 항목에서 제안한 "지역 연계 학교-교육청 선정 국가장학금 제도"의 재원은 중앙정부가 마련할 수도 있지만 지자체가 지역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지역에서 양성된 인재가 지역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지자체들은 매우 기꺼이 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지역인재들은 대학 재학 시 지역에 있는 자신의 모교에 가서 멘토링을 제공하도록 하여, 지역인재의 선순환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 초중고 학생들이 자신의 선배가 지역의 대학에서 경쟁력 있는 대학교육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초중고-대학 단계에서 지역인재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학생 모교 멘토링 제도는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자들에게 국가장학금 수혜에 상응한 사회적 기여가 요구되지 않아 국가장학금이 수혜성 복지지출의 성격으로 잘못 인식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국가장학금의 지원으로 양성되는 인재들이 졸업 후 뿐 아니라 졸업 전에도 국가 지원에 상응하는 사회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멘토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 보인다. 현재 이미 한국장학재단은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의 멘토링 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지역 인재선순환의 관점에서 제도를 보완하여야 한다.

(4) 인정소득액 기준을 소득액 기준으로 변경

현재 국가장학금에서 지원단가 산정에 사용되는 소득 기준은 소득액이 아닌 인정소득액으로, 인정소득액 산정에 가계의 소득뿐 아니라 자산 수준이 반영되어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높은 구간에 속하는 것으로 산정되게 된다. 자산 수준을 반영한 구간 구분으로 인해 국가장학금 8구간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소득분위 5 또는 6분위에 대응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장학금을 전체 대학생의 80%를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면, 인정소득액이 아닌 소득액을 기준으로 구간을 산정해야 한다.

(5) 국가장학금 유형 II 제도 개선

국가장학금 유형 II 지원을 위한 대학 평가에서 요건으로 되어 있는 대학들의 등록금 동결을 풀어야 한다. 지난 15여년간 유지된 대학 등록금 동결로 인해 대학의 교육 여건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대학 교원에 대한 급여도 동결되어 우수한 교원의 초빙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 사립대학교 교직원의 급여가 15년간 동결되어, 물가상승률 수준의 급여 인상이 이루어진 국공립대학 교원의 급여가 상대적으로 30% 정도 높아지고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급여 인상이 이루어진 민간 기업 근로자 급여가 40% 정도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대학의 경쟁력이 산업 및 사회 경쟁력을 제약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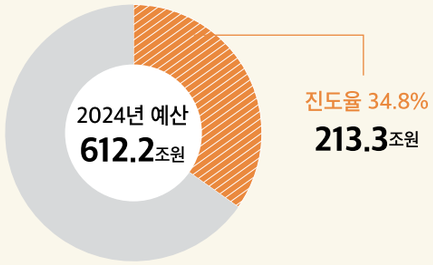
제도 개선은 국가장학금 유형 II 평가에서 등록금 동결 요건을 등록금 인상률을 반영하는 지표값 평가로 변경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여전히 고등교육법에서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으로 인해 제약될 것이므로, 과도한 등록금 인상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중장기적으로 국가장학금 유형 II 지원을 위한 대학 평가 자체를 폐지하고 국가장학금의 일정 비율을 간접비 형태로 대학에 지원하는 형태로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대학들은 국가장학금의 확대에 대해서 내심 별로 반기지 않는데, 대학으로서는 국가장학금의 확대가 등록금 수입 자체를 증가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장학금에 간접비를 산정하여 지원하게 되면, 대학들의 재정수입이 확대되는 효과뿐 아니라 대학의 재정 운영 자율성이 높아지고 저소득가계 자녀와 지방대학에 대해서 정부 지원이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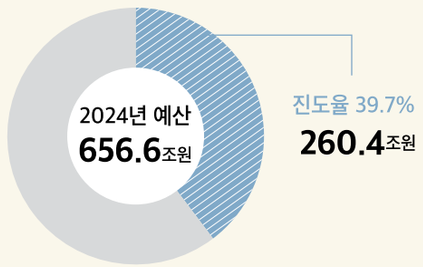
2024년 4월 기준 **재정동향**



총수입 **213.3조원**



총지출 **260.4조원**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국가채무
47.1조원 적자 (누적 기준)	64.6조원 적자 (누적 기준)	1,128.9조원 (누적 기준)

주: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예산 대비 당월 누계 규모의 비율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4.6.

총수입 · 총지출

총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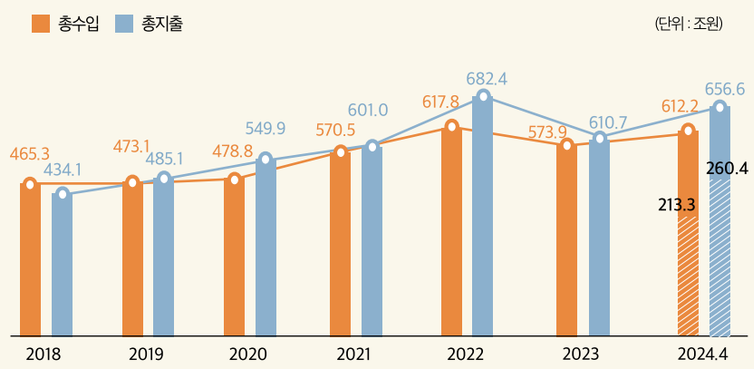
213.3조원

전년 동기 대비 **+1.5조원**

총지출

260.4조원

전년 동기 대비 **+19.6조원**



주: 2023년까지는 결산, 2024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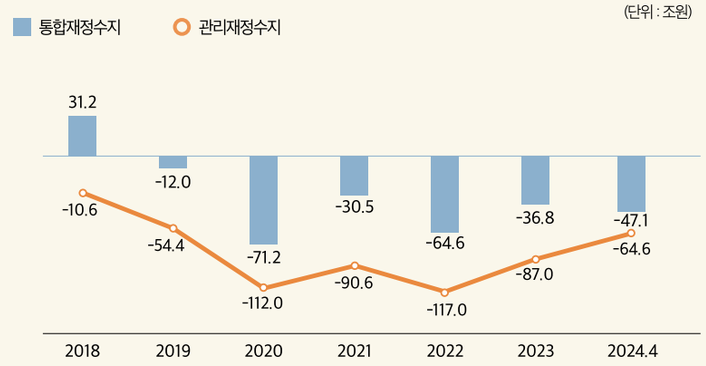
47.1조원 적자

전년 동기 대비 **-18.1조원**

관리재정수지

64.6조원 적자

전년 동기 대비 **-19.2조원**



주: 2023년까지는 결산, 2024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사회보장성기금수지

17.5조원 흑자

주 1)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
2)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4개 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
3)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하여 산출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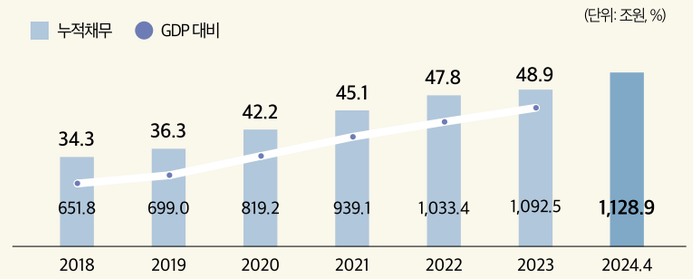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1,128.9조원

전월 대비 **+13.4조원**

전년 말 대비 **+36.4조원**



주 1) 중앙정부 채무 기준
2) 한국은행 신계열 GDP 기준
3) 2024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한국은행 GDP 규모 확정 시 제공 예정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해외재정동향

재정정보분석센터

주요국

1) 미국

◎ 재무부가 발표한 '24년 4월 말 기준 월별 재정 현황에 따르면, '24회계연도 7개월간의 순이자지출은 5,140억 달러로 국방과 메디케어 분야 지출을 넘어섰음

◎ 의회예산처는 시나리오별 장기 재정 전망을 통해, 비농업 부문의 생산성이 하락하는 경우와 재량지출 및 수입이 과거 30년 평균을 유지하는 경우 등에 '54년 연방부채가 200%를 넘을 수 있음을 제시

2) 일본

◎ 경제재정자문회의는 '일본의 재정운영방향에 대한 정책제안'을 재무부에 제출하였으며, 재정건전화와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지방,보육, 의료, 연금 등 각 분야 재정사업 효율화 방향 제시

3) 독일

◎ 2024년 4월 연방정부 예산 추이에 관한 주요 내용 발표, 재정 수입은 1,252억 유로, 지출은 1,496억 유로, 재정수지는 244억 유로 적자 기록

◎ 국제통화기금(IMF), 독일 정부에 헌법상 명시하고 있는 부채 제동장치(debt-brake) 기준을 완화할 것을 권고, 부채 한도를 조정해 공공투자를 확보하고 주요 우선순위에 집중할 필요

4) 프랑스

◎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프랑스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강등했으며, 프랑스의 예상보다 높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원인으로 언급

5) 영국

◎ 북아일랜드에 33억 파운드를 지원하는 임시 재정 프레임워크에 합의

◎ 통계청(ONS) '24년 4월 공공부문 재정통계 발표, 수입(857억 파운드), 지출(1,063억 파운드), 수지(-205억 파운드), 순부채(2조 6,874억 파운드) 기록

국제기구

1) IMF

◎ 크리스티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양극화를 극복하고 미래의 풍요를 지속하기 위한 주요 투자분야로 기후, 차세대 산업동력, 인적자원을 제시

2) OECD

◎ 디지털 경제전망(Digital Economy Outlook)을 발간하여,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기술에 따른 ICT분야의 성장률, 가계 및 정부에 도입된 디지털 기술의 범위 등의 내용 제시

3) 유럽연합

◎ 집행위원회, '24년 봄 경제전망 발표, EU GDP 증가율을 '24년 1.0%, '25년 1.6%로 전망했으며, '23년 이후 경제 전환기를 맞이해 올해와 내년에 걸쳐 성장이 점진적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주요국 월간 재정통계('24.6.10.기준, 최신)

			총수입	총지출	수 지
미국 4월 말 기준	당월	규모	7,762억 달러	5,667억 달러	2,095억 달러 흑자
		전년 동월 대비증감률	21.6%	22.6%	18.39% (333억 달러)
	회계연도 누적 (7개월 차)	규모	2조 9,642달러	3조 8,194억 달러	8,552억 달러 적자
		전년 동월 대비증감률	약 10.3%	약 5.8%	-7.5% (697억 달러)
독일 4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4개월 차)	규모	1,252억 유로	1,496억 유로	244억 유로 적자
		전년 동월 대비증감률	8.9%	4.8% (약 76억 유로)	-42.3% (174억 유로)
프랑스 3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3개월 차)	규모	1,128억 유로	726억 유로	528억 유로 적자*
		전년 동월 대비증감률	-1.2%	-2.7%	3.5% (194억 유로)
영국 4월 말 기준	당월 및 회계연도 누적 (1개월 차)	규모	857억 파운드	1,063억 파운드	205억 파운드 적자
		전년 동월 대비증감률	1.9%	3.0%	8.1% (15억 파운드)

* 일반예산수지(General budget balance)에 특별회계 수지(Balance of special Treasury accounts)를 합산한 재정운영결과(General budget outturn)기준임
** 자료: 미국) Department of Treasury, Monthly Treasury Statement for April 2024
독일) 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EN/Standardartikel/Press_Room/Publications/Monthly_Report(5.24.발표)
프랑스) Agence France Trésor, Monthly Bulletin, May 2024(No.408)
영국) Office of National Statitstics, Public Sector Finances, UK: April 2024

미국

5.10.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 '24년 4월 말 기준 월별 재정 현황 요약 보고서(Monthly Treasury Statement) 발표[1)]

- **재무부에서 최근 발표한 월별 예산 현황에 따르면 '24회계연도 7개월간 순이자지출은 5,140억 달러로 국방(4,980억 달러)과 메디케어(4,650억 달러) 분야 지출을 넘어섬**
  - 이자지출은 '20회계연도 3,450억 달러(GDP 대비 4.6%)에서 '23회계연도 6,590억 달러(GDP 대비 2.4%)까지 증가하였으며 '24회계연도 말에는 8,700억 달러(GDP 대비 3.1%)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이자지출은 현재 예산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크며, '51회계연도에는 가장 큰 항목이 될 것으로 예상
  - 부채 증가는 지속적으로 금리 상승에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이자 비용 증가에도 영향을 미쳐 다른 우선순위에 대한 지출 감소와 미래 세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
- **4월 말 기준 연방 재정적자는 약 8,552억 달러로, '23회계연도 동기간 대비 약 497억 달러 감소하였으나, 이번 회계연도 말 기준 적자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
  - '24회계연도 7개월간의 수입은 약 2조 9,640억 달러로 '23회계연도 동기간 대비 약 10%(2,780억 달러) 증가하였으며, 지출의 경우 3조 8,190억 달러로 전년 동기간 대비 약 6%(2,080억 달러) 증가

5.21. 의회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 경제 및 재정 시나리오별 장기 재정 전망 발표[2)]

- **3월 발표한 기준전망에서는 연방 수입과 지출에 관한 현행법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향후 30년 동안 GDP 대비 재정 적자가 크게 증가하여 연방부채는 '24년 GDP 대비 99%에서 '54년 166%까지 증가 예상**
- **경제 여건이나 재정 정책의 변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기 위해 기준 전망과 다른 8가지 시나리오(경제 여건에 따른 6가지, 재정 여건에 따른 2가지)에 대한 분석 결과 발표**
  - 비농업 부문의 노동과 자본의 생산성이 CBO 전망보다 연간 0.5%p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경우 '54년 연방부채는 GDP 대비 124%, 전망보다 0.5%p 더 느리게 증가하는 경우 '54년 연방부채는 211%
  - 연방부채의 평균 이자율이 변동('24년 기준 5bp)하여, 기준 전망치보다 더 높은 경우 '54년 연방부채는 GDP 대비 217%, 기준 전망치보다 낮은 경우 '54년 연방부채는 129%로 전망
  - 정부 차입이 민간투자를 장기 전망 대비 50%로 낮추면 '54년 연방부채는 GDP 대비 250%를 초과할 것이나, 민간투자에 영향이 없다면 '54년 연방부채는 130%에 달할 것으로 분석
  - 30년간 재량 지출과 수입의 GDP 대비 비율이 과거 30년 동안의 평균치(재량 지출과 수입은 매년 GDP의 7%, 17.2%로 설정)를 유지한다면, '54년 연방부채는 GDP 대비 25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
  - 30년간 연방부채를 GDP의 99%로 유지하는 경우 재정적자(순이자지급 제외)는 평균적으로 GDP의 0.4%로 예상되며, 비이자지출 감소나 세입 확충을 통해 1.9%까지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음

1) https://www.crfb.org/blogs/interest-costs-just-surpassed-defense-and-medicare
2) https://www.cbo.gov/publication/60169

일본

5.21. 일본 경제재정자문회의는 '일본의 재정운영방향에 대한 정책제안'을 재무부에 제출[3)]

- **국가채무가 높은 국가로서 금리 상승 국면과 향후 지진 등에 대응할 재정소요까지 고려하면 지속적인 재정 건전화의 필요성 높음**
  - 지방정부에 있어서는, 공무원 확보가 어려워지는 가운데 지자체 DX(디지털 전환), 업무 통폐합을 통한 효율화가 중요하며 사회자본 정비, 교육부문의 질 향상 등이 필요
- **고령화 지속 추세에서 사회보장 및 의료 장기요양보험(개호) 개혁을 통해 예산 투입 및 보험료 부담 억제를 위해 노력할 필요성 제기**
  - 어린이·육아 세대를 지원하도록 사회 의식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저출생 대응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적절한 KPI를 설정해 계획·실행·평가·개선(PDCA,성과관리)사이클을 통한 재검토 실시
  - 의대 정원의 적정화 및 의료기관의 지역 · 진료과 쏠림 현상 교정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며, 자가 건강관리 확산 지원과 이에 부합하는 의료보험급여 범위의 재검토, 세대간 공평성 확보를 위해 연령별 지원이 아닌 금융자산을 포함해 측정한 능력별 지원 체계로의 전환 모색 필요
  - 요양 관련해서는 비용의 20%를 부담하는 대상자의 범위 확대, 경증 대상자에 대한 지역지원사업 이행 등 급부와 부담의 재검토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
  - 금년 발표 예정인 재정재계산 결과를 근거로, 경제활동 유인에 중립적인 사회보장 시스템 제고 방향에 부합하도록 연금체계 개혁이 필요하며, 정부 추가 재원 투입이 필요한 경우 재원 확보가 선행돼야 함

독일

5.24. '24년 4월 연방정부 재정 수입 및 지출 동향에 관한 주요 내용 보고[4)]

- **'24년 4월 연방정부 수입은 총 1,252억 유로로 전년 대비 8.9%(약 102억 유로) 증가**
  - 조세수입은 1,120억 유로로 '23년 4월보다 4.8%(51억 유로) 증가, 세외 수입(other income)은 '23년 4월보다 63.9%(51억 유로) 증가
- **'24년 4월 연방정부 지출은 총 1,496억 유로로 전년 대비 4.8%(약 76억 유로) 감소**
  - 지출 감소는 투자 지출이 전년 대비 42.9%(68억 유로) 감소한 데 따른 것이며, 소비 지출은 전년대비 0.5%(8억 유로) 감소해 지난해와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
- **'24년 4월 연방정부 재정운영은 약 244억 유로의 적자를 기록**

3) www.mof.go.jp/about_mof/councils/fiscal_system_council/sub-of_fiscal_system/report/zaiseia20240521/zaiseia20240521.html
4)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EN/Standardartikel/Press_Room/Publications/Monthly_Report

5.28. 국제통화기금(IMF), 독일 정부의 지출 압박이 커지면서 공공 투자 확보를 위해 부채 제동장치(debt-brake)에서 규정하는 재정 지출 한도를 조정할 것을 권고[5]

- IMF는 독일의 채무준칙이 부채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에는 효과적이나, 지출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부채 억제를 적당히 완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
  - 독일은 특히 인구 노령화로 인해 추가 지출 압박에 직면해 있으며, 이외에도 국방비 지출 증가와 운송·에너지·통신 인프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자 수요 존재
- IMF 사무총장(Kevin Fletcher)은 기자회견에서 부채 제동장치 완화를 통해 절실히 필요한 분야에 대한 투자와, 주요 우선순위에 더 많은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

프랑스

6.1.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국가 재정상태 악화를 이유로 프랑스 국가 신용 등급을 11년만에 강등[6]

- S&P는 프랑스 재정 적자가 '27년에도 GDP의 3%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며, 국가신용등급을 강등
  - 지난해에도 프랑스 재정적자는 GDP의 5.5%로 종전 예측치보다 훨씬 높았다고 설명했으며, 일반 정부부채는 지난해 GDP 대비 109% 수준에서 '27년 112%로 증가할 것이라 예측, 다만 국가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
- 프랑스 재무장관(Bruno Le Maire)은 현지 언론에 이번 등급 강등의 주요 이유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가계와 기업에 대한 부양책으로 이뤄진 막대한 재정지출을 언급, '27년 공공부문 적자를 3% 미만으로 유지하겠다는 목표 재확인
  - 한편 S&P는 이날 프랑스뿐만 아니라 발트 3국(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의 신용등급도 강등했으며, 발트해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이 발트해 지역의 중기적인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판단하여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

5) https://morningstar.com/news/dow-jones/202405284711/imf-urges-germany-to-ease-debt-brake
6) https://www.ft.com/content/20815670-2a94-4ee5-a013-0f64ccf529fb

영 국

5.21. 북아일랜드 공공부문 안정을 위한 33억 파운드 지원의 임시 재정 프레임워크(Interim Fiscal Framework)에 합의[7]

- 영국–북아일랜드는 북아일랜드의 행정부 정상화를 위한 33억 파운드 규모의 임시 재정 패키지를 이행하는데 상호 합의
  - 영국은 올해 2월 북아일랜드의 정치 정상화를 조건으로, 북아일랜드의 공공 부문 서비스 개선을 위한 33억 파운드 지원을 약속하였으며, 양국은 이러한 임시 재정 프레임워크에 합의
  - 북아일랜드는 지난 2년간의 정치적 교착상태를 끝내고 올해 2월 내각을 구성하였으나, 그간 행정부의 장기 공백으로 인해 공공부문 임금 인상 등을 결정하지 못해 상황이 악화되며 역대 최대 규모 공공부문 파업 등이 벌어짐
- 이번 합의를 통해 북아일랜드 행정부는 공공서비스 제원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한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등의 기회로 활용할 전망

5.22.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ONS) '24년 4월 공공부문 재정통계(Public Sector Finances) 공시[8]

- '24년 4월 수입은 총 857억 파운드로 전년 동기대비 16억 파운드 증가
  - 수입 중 세입은 '23년 4월 대비 22억 파운드(3.8%) 증가한반면 국민보험 부담금(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 수입 15억 파운드(10.4%) 감소
- '24년 4월 지출은 총 1,063억 파운드 전년 대비 31억 파운드 증가
  - 공공 서비스 및 관련 지원금 확대에 따라 지출이 증가하였으나, 정부의 이자 지급액 감소, 에너지 지원 제도 종료에 따른 보조금 지급액 감소 등에 따라 일부 상쇄
- 공공부문 순부채는 2조6,874억 파운드로 연간 GDP의 약 97.9% 수준



7) https://www.gov.uk/government/news/deal-reached-on-interim-fiscal-framework-for-northern-ireland
8)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public-sector-finances-bulletin

국제기구

IMF 금융 및 개발 매거진 (Finance& Development) IMF 창립 80주년 기념호 발간[9)]

•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권두 컬럼 "내 손주를 위한 경제적 기회"를 통해, 기후 경제와 차세대 산업혁명, 사람에 대한 투자가 미래의 생활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IMF 최근 연구결과 언급

– 케인즈가 1930년 동일한 제하의 글에서 예측한 대로의 경제 성장이 지난 80년간 이뤄졌으며, 풍요를 손주세대까지 이어가기 위해서는 21세기 다자주의와 협력도 중요함을 역설

OECD 디지털 경제전망(Digital Economy Outlook 2024(vol 1)) 발간[10)]

• OECD 디지털 경제전망은 회원국의 설문조사 결과, 관련 통계 등을 기반으로 디지털 분야의 경제 및 기술 현황, 관련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 등을 제시

– 이번호는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기술에 따른 ICT분야의 성장률, 인공지능(AI)의 미래와 긍정적인 효과, 가계·기업·정부에 도입된 디지털 기술과 디지털 격차의 규모와 범위 등의 내용 포함

EU 집행위원회, '2024년 봄 경제전망(Spring 2024 Economic Forecast: A gradual expansion amid high geopolitical risks)' 발표[11)]

• 집행위는 '24년 GDP 성장률을 EU는 1.0%, 유로지역에서는 0.8%로 예상했으며, '25년에는 EU는 1.6%, 유로지역은 1.4%로 경제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경제담당 집행위원 파올로 젠틸로니(Paolo Gentiloni)는 EU 경제가 올해 1분기 눈에 띄게 회복했으며, '23년 이후 전환기를 맞이해 올해와 내년에 걸쳐 성장이 점진적으로 가속화될 것임을 언급





9) www.imf.org/en/Publications/fandd
10) https://www.oecd-ilibrary.org/science-and-technology/oecd-digital-economy-outlook-2024-volume-1_a1689dc5-en
11) https://ireland.representation.ec.europa.eu/news-and-events/news/spring-2024-economic-forecast-commission-maintains-its-growth-forecast-ireland-2024-2024-05-15_en



사회후생의 기준: 칼도-힉스 기준에 대하여

옥동석 인천대학교 명예교수, 전)조세재정연구원장, dsoak@naver.com

어떠한 사회적 변화도 이득을 보는 사람(이득자)과 손실을 보는 사람(손실자)이 반드시 존재한다. 사회적 변화로 10명의 사람 중 6명이 각각 5의 손실을 입고, 나머지 4명이 각각 50의 이득을 누린다고 하자. 이 정책을 민주적인 선거에 맡긴다면 반대 6, 찬성 4로 기각될 것이다. 그런데 기업가가 등장하여 이러한 변화를 사업으로 수행한다면, 30의 비용을 투입하여 200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이 기업가는 170의 부가가치를 -임금, 지대, 이자, 이윤으로 처분가능한- 창출함으로써 사회를 풍요롭게 한다. 이 사례는 민주주의가 견제의 수단이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기업가의 창의를 우선해야 한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런데 기업가들이 이러한 예시적 변화를 도저히 사업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면 -손실과 이득을 기업의 비용과 수입으로 전환하는 가격 메카니즘이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이 변화를 민주적 다수결에 방치하며 포기해야 하는가? 경제학자들은 국민들을 설득해서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러한 변화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200의 이득 중 30을 손실자 보상에 사용한다면 우리 사회는 만장일치로 -물론 배아파하는 반대자는 없어야 한다- 170의 이득을 누릴 수 있다. 설령 이러한 보상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회가 번영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신념을 경제학자들은 칼도-힉스(Kaldor-Hicks) 기준 또는 파레토(Pareto) 보상기준이라고 말한다.

칼도-힉스 기준의 등장

후생경제학이란 이득과 손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회적 문제에 규범적 판단을 내리는 경제이론의 체계이다. 공리주의의 등장과 한계혁명으로 후생경제학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초기의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마샬, 왈라스, 피구, 에지워스 등- 효용의 측정가능성과 개인간 비교가능성을 가정하면서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적극 개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특히 피구는 1920년「후생경제학」에서 후생극대화를 위한 두 가지 중요한 정책분야로서 사회적 순생산 증가와 소득 재분배를 제시하였다. 특히 후자에서 한계효용체감을 전제로 하여 '덜 강렬한 욕구를 희생시키면서 더 강렬한 욕구를 충족시키면 만족의 총합이 분명히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1)]

소득재분배에 대한 피구의 논거는 1932년 과학적 실증주의를 강조하는 로빈스(Lionel Robbins)의 반격으로 점차 힘을 잃기 시작하였다.[2)] 효용을 개인 간에 비교가능하도록 측정할 수 있는 과학적 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경제학은 실증가능한 이론만을 쌓아가야 하고 가치판단의 영역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주장은 이후 많은 호응을 얻었지만 1938년 해롯(R.F. Harrod)은 -케인스 전기 작가로 유명한- 개인 효용의 비교가능성이 없다면 후생경제학의 정책적 처방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비판하였다. 당시 경제학자들의 관심사였던 곡물법(Corn Law) 폐지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3)]

---

1) Pigou, A.C.(1932), *The Economics of Welfare*, fourth edition, 1932, p.89

2) Robbins, Lionel(1932), *An Essay on the Nature and Significance of Economic Science*, New York University Press; 한국어 번역본 이규상, 「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이 지닌 속성과 중요성」, 지식을만드는지식, 2019.

3) Harrod, R. F.(1938), "Scope and Method of Economics," *The Economic Journal*, Vo.48, No.191, Sep. 1938, pp.396-397. 인용문의 [ ]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첨가하였다.

> 곡물법 폐지[곡물 관세의 철폐]를 생각해보자. 이는 특정 생산요소의 -토지- 가치를 하락시킨다. 사회 전체의 이득은 지주의 손실을 상회한다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될 수 있지만, 이는 개인들이 어떤 의미에서 평등하다고 간주될 때에만 그렇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일부 사람에 대한 손실과 -손실이 있다는 사실은 결코 부인할 수 없다- 일반적인 이득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 것인가? 서로 다른 개인들의 효용이 비교될 수 없다는 사실이 명확하다면, 후생경제학의 처방은 존재할 수 없고 더욱이 모든 처방들이 무의미할 것이다. 경제학자는 조언가로서 완전히 무용하며, 또 그의 추론이 최고의 멋진 가치로 인정되지 않는 한, 그는 완전히 무시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로빈스와 해롯의 주장 사이에서 후생경제학자들은 곤경에 처했다. 그런데 1939년 칼도(Nicholas Kaldor)와 힉스(John R. Hicks)는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거의 동시에 제시하였다. 이를 칼도-힉스 기준이라 하는데, 어떤 정책으로 이득자가 손실자의 손실을 보상하고도 남는 순이득이 있다면 그 정책은 바람직하다. 이 내용을 칼도는 다음과 같이 압축하였다.[4]

> 그러므로 어떤 정책이 실물 생산량의 증가와 그에 따른 총실질소득의 증가를 가져온다면, 이 정책에 대한 경제학자의 판단은 개인 만족의 비교가능성 여부를 떠나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경우들에서, 사람들 모두의 생활을 이전보다 더 낫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의 생활을 더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 일부 사람의 생활을 더 낫게 만드는 것이 어쨌거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제학자는 사회의 어느 누구도 고통을 겪지 않는다는 사실을 특별한 지표를 채택하여 증명할 필요가 -사실은 결코 증명할 수도 없지만- 없다. 경제학자가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겪게 될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손실을 완벽하게 보상받더라도 사회의 나머지 사람들이 여전히 이전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충분하다. 자유무역의 결과로 지주들이 실제 보상을 받건 받지 않건, 그것은 경제학자가 경제학자의 자격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없는 정치적 문제이다.

그리고 힉스는 1906년에 제시된 파레토(Vilfredo Pareto)의 효율성 개념을 설명하며 칼도의 보상원칙을 지지하였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해하지 않으면서 일부 사람들에게 편익을 주는 변화"를 효율성의 증가로 설명하면서, 만약 사회가 최적의 상태에 있지 않다면 다른 사람들을

4) Kaldor, Nicholas(1939), "Welfare Propositions of Economics and Interpersonal Comparisons of Utility," *The Economic Journal*, Vo.49, No.195, Sep. 1939, p.550.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적어도 일부 사람들의 욕구를 증진시키는 효율성 증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정부는 재정수입을 활용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상하는 특별한 조치가 취해진다는 것을 항상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5] 파레토 효율성과의 이러한 연관성 때문에 칼도-힉스 기준은 파레토 보상기준으로도 불리운다.

사회후생함수에 대한 논의

칼도-힉스 기준의 등장으로 효용의 측정가능성과 개인간 비교가능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신후생경제학(New Welfare Economics)"의 시대가 열렸다. 그런데 2년 후 스키토브스키(Scitovsky)의 결정적 반론이 이어졌다.[6] 어떤 변화가 칼도-힉스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그 반대의 변화 역시 칼도-힉스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이론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특정한 변화로 야기되는 사회적 생산의 변화로 소득분배가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화 공간의 동일한 점에서 표시되는 사회후생 수준이 소득분배 형태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다.[7] 따라서 스키토브스키의 지적은 사회후생이 분배

5) Hicks, J. R.(1939), "The Foundations of Welfare Economics," *The Economic Journal*, Vo.49, No.196, Dec. 1939, p.698 그리고 pp.700~701.

6) Scitovsky, T.(1941), "A Note on Welfare Propositions in Economics,"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pp.77~88.

7) 개인들의 효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인 사회무차별곡선은 소득분배에 따라 교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Mishan, E. J.(1960), "A Survey of Welfare Economics, 1939-59" *The Economic Journal*, Vol. 70, No. 278, pp.220-238 참조.

적 함의를 벗어나 정의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한 것이었다.

이러한 비판에 따라 경제학자들은 개인별 효용에 사회적 가중치를 부여하는 버그슨(A. Bergson)의 사회후생함수 접근을 지지하기 시작하였다.[8] 분배에 대한 가치판단 없이는 경제정책 변화가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후생함수를 통해 이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자는 것이다. 사회적 가중치는 사회후생에 대한 사회윤리적 판단을 반영하기에 개인 효용의 측정가능성, 비교가능성과는 무관한 개념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중치는 경제학의 외부에서 주어지는 가치판단에 따르기에,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방법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고 독재적인 방식으로 사회에 부과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후생함수 접근은 개인들의 효용에 대한 사회적 가중치의 과학적 결정방식을 제시하지 못했다. 1951년 애로우(Kenneth J. Arrow)는 사회후생함수가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개인들의 선호로부터 만족스럽게 구성될 수 없다는 불가능성 정리(Impossibility Theorem)를 증명하였다. "우리가 효용의 개인간 비교가능성을 배제한다면, 개인의 취향들로부터 사회적 선호를 연결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만족스럽고 또 개별 선호들의 광범한 집합으로부터 정의될 수 있는- 일방적이거나 독재적인 것이다."[9] 비-독재적인 사회후생함수의 도출이 불가능하다는 애로우의 증명은 사회후생함수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후생함수는 사회후생에 관한 유일한 최적의 위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인정된다. 사회의 최적은 수많은 파레토 최적점들 중에서 최대의 사회후생을 보장하는 유일한 지점이다.[10] 이 지점은 경제적 효율성과 분배적 정의를 모두 달성하는 최적해가 된다. 이처럼 사회후생함수 개념은 수학적으로 표현되는 후생경제학의 형식적 체계를 완성하는 뛰어난 이론적 접근이지만, 현실의 정책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추상적 설명에 불과하다.

칼도-힉스 기준의 현실적 적용

칼도-힉스 기준의 이론적 완결성에 흠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현실의 정책에서는 그 적용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930년대 대공황에서 미국은 대규모 수자원개발 프로젝트들을 -대표적으로 Tennesse Valley Authority에 의해- 수행하였는데, 1936년 홍수통제법(Flood Control Act)에서 이들의 평가기준을 "그 대상자가 누구이건 관계없이, 발생하는 편익이 예상되는 비용을 초과"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11] 이는 칼도-힉스 기준을 법률에서 규정한 최초의 사례인데,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공공사업 적용에 관한 학술 문헌들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확산에 힘입어 1972년 미국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는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공공사업에 칼도-힉스 기준의 비용편익분석을 요구하였다.[12]

이후 비용편익분석은 공공투자사업을 넘어 건강, 안전 및 환경상의 위험에 대한 정부 규제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학계의 요구가 제기되었다. 이에 부응하여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 연방정부의 규칙제정 과정에서 비용편익분석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발령하였다. 이후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었지만 이러한 행정명령은 클린턴, 오바마 대통령을 거치며 더욱 강화되었다.[13] 이렇게 비용편익분석이 미국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자 많은 국가와 국제기구들에서도 수용하면서 전 세계적인 확산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칼도-힉스의 효율성 기준은 정책 현장에서 실용적 가치를 인정받았는데, 제반 사회현상에 대한 이론적 설명에서도 매우 유용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960년 코즈(Ronald Coase)는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과정에서 소요되는 거래비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생산비용만을 강조하는 전통적 신고전파 경제학과 달리- 점차 경제학자들은 거래비용과 생산비용을 모두 포괄하는 사회적 비용의 개념으로 효율성 기준을 적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칼도-힉스의 효율성 기준이 제반 경제제도의 발전을 -재산권과 시장의 확립, 기업의 존재,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분화, 조직 거버넌스 등- 설명하는 유용한 도구로서 인정받게 되었다.

특히 법학자 포스너(Richard Posner)는 1973년에 「법의 경제적 분석(*An Economic Analysis of the Law*)」을 출간함으로써 칼도-힉스 기준의 대중화, 합법화 그리고 세계화에 크게 기여하였다.[14] 그는 제1부에서 경제적 사고의 핵심으로 칼도-힉스의 효율성 극대화 논리를 소개한 후, 경제법 이외의 법률 영역에 적용되는 많은 법리들을 -예컨대, 재산권, 손해배상책임, 계약의 권리와 구제, 형벌, 사법부의 규칙, 소송절차, 헌법, 인종차별, 사상과 종교의 자유, 수색·압수·

8) Bergson(1938) "A Reformulation of Certain Aspects of Welfare Economic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938.

9) Kenneth J. Arrow(1951), *Social Choice and Individual Values*, second edition, p.59 참조. 불가능성 정리에 대한 증명은 이승훈, 장지상, 전병헌, 「미시경제학」, 생능, 2020, pp.365-368 및 374-376 참조.

10) 일반적인 미시경제학 교과서에서 효용가능경계와 사회무차별곡선의 접점으로 표현된다.

11) Marglin, Stephen A.(1967), *Public Investment Criteria: Benefit-Cost Analysis for Planned Economic Growth*, p.16 참조.

12) 1952년에 제정되고 1972년에 개정된 미국 관리예산처(OMB) 예산회람(Budget Circular) A-94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13) 미국에서 규제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의 적용은 Carey, P. Maeve(2014), *Cost-Benefit and Other Analysis Requirements in the Rulemaking Proc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참조.

14) 이의 한국어 번역본은 정기화 역(2004), 「법경제학(상),(하)」, 자유기업원 참조.



심문 등-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학문적 성과는 -물론 여전히 논란은 지속되고 있지만- 칼도-힉스 기준이 다수 학자들에 의해 보편적으로 수용가능한 사회후생의 기준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칼도-힉스 기준의 보충적 논거들

칼도-힉스 기준을 지지하는 것은 이러한 현실적 성과 외에도 이론적인 논거가 추가로 보완될 수 있다. 첫째, 칼도-힉스 기준은 여러 사회적 "변화들의 조합이 당해 국가의 모든 사람들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다"는 기준이기 때문이다.[15] 칼도-힉스 기준에 대한 가장 심각한 비판은 소득분배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준은 소득분배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과 소득분배의 이분적(dichotomy) 접근을 지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소득분배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에 대한 개별적 보상보다는 여러 보상들을 패키지로 묶어 일반적인 소득분배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이 될 수 있다.

칼도-힉스 기준은 보상을 패키지적 관점에서 접근하는데 반해, 사회후생함수 접근은 개인별 효용에 사회적 가중치를 부여하며 개별 정책별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정책변화,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실을 볼 것인지 사전에 확정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그러한 변화가 무작위적으로 공정하게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를 거부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효율성 기준과 일반적인 소득분배 정책을 이원화하는 것은 충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둘째, 파레토 효율성과 칼도-힉스의 보상기준은 "그 자체 윤리적인 명제, 가치판단이지만 최소한의 전제를 요하고 또 광범한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16] 파레토 효율성의 세 가지 전제는 ①모든 구성원들의 후생을 감안해야 하고, ②개인은 자신의 후생에 대한 최선의 판단자이며, ③어떤 변화가 다른 사람들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적어도 한 사람의 후생을 증가시키면 이는 사회후생의 증가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소득분배 정책을 수반하는 칼도-힉스 기준 역시 최소한의 전제를 요하며 광범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회윤리적 기준이 된다.

셋째, "어떠한 시장과정도 결정적인 결과는 없다. … 시장과정의 결과는 다양한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과 사건들이 일어나는 순서에 따라 달라진다."[17] 사회적 변화와 그 결과는 연속적으로 지속되는 일종의 과정으로서 정적 상태(static state)의 이론을 근거로 제기되는 스키토브스키의 비판이 결정적이라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의 비판은 신고전파적 결정모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이는 정태분석으로서 경제행위의 시간적 차원을 무시하고 변화에 대한 조정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스키토브스키의 비판은 정책 결과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하고 심각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데, 정책의 동학적 전개과정에서는 이에 대한 대처가 이루어질 기회는 -민주사회의 갈등관리 측면에서-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15) Stiglitz, Joseph E. and Jay K. Rosengard(1986), *Economics of the Public Sector*, fourth edition, p.65.

16) Buchanan, James M.(1959), "Positive Economics, Welfare Economics, and Political Economy," *The Journal of Law & Economics*, Vol. 2, , p.125 참조.

17) Lachmann, Ludwig M.(1986), *The Market as an Economic Process*, George Mason University, p.4 참조.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이후 시기 재정정책의 전개와 역사적 시사점(1)*

- 긴축 및 확장 재정정책의 맥락에서 -

우명동 성신여자대학교 명예교수



* 본 연구는 지면관계상 금번 6월호와 다음 7월호로 2회에 걸쳐 나누어 싣고 있음. 이런 연유로 본문 54쪽에 제시된 “(주24참고)”와 같은 내용은 7월호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을 참고바람.

I. 들어가며

일반적으로 재정정책은 해당 시기 사회경제적 상황에 의해 제약을 받아 그 방향성이 정해지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활동이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강제적 작용이라는 맥락에서 해당 시기 사회경제구조를 선도해나가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경제적 의의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재정정책은 그 사회의 ‘대내외적 여건’에 의해 제약을 받으면서 그 모습을 달리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해당 사회경제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당시 국가권력의 ‘정책적 의지’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현실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특히 집권적이고 독재적 권력을 구사하는 정부가 수행하는 재정정책은 전자와 같은 사회적 제약보다는 해당 정부의 권력적 의지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구사되는 경향이 강하기 마련이다.

이와 같이 행해지는 재정정책의 실상은 ‘현상적’으로는 무엇보다 총량적 측면에서의 재정정책의 방향으로서 “긴축과 확장의 맥락”으로 표출된다. 그러나 이러한 총량적 긴축 또는 확장의 추이만 보아서는 그러한 정책이 선도하고자 하는 사회경제의 실상을 가늠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와 같은 총량적인 긴축 또는 확장정책이 갖는 사회경제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파악해내기 위해서는 그러한 긴축과 확장정책의 이면에 내재되어 있는 재정지출과 재정수입의 구성(구조)을 확인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재정구조만 가지고도 여전히 현실의 사회경제상태에 주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내기에는 어려움이 남기 마련이다. 그것은 재정활동의 대상으로서 국민들은 서로 다른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생산활동의 주체로서 기업 내지 산업 또한 서로 다른 여러 기업 또는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재정지출 또는 재정수입 구조라 하더라도 그것이 갖는 구체적인 ‘사회경제적 의미(실체)’를 해명해내기 위해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현실에서 경비가 지출되고 수입(조세)이 징수되는 구체적인 정책구조, 즉 그 법적 내지 제도적 틀(제약 관계)을 확인하는 단계를 거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다 같은 재정지출과 재정수입이라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에 따라 서로 다른 계층 내지 서로 다른 기업 또는 산업활동에 주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긴축 내지 확장과 같은 현상적으로 제시되는 재정정책의 추상적인 모습에서 출발해서 현실에서 구체화되는 당시의 사회경제구조적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단계별로 그 정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명해가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이제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이후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 후 새로운 정체(政體)가 수립되기 이전인 1979년까지의 시기, 흔히 일컫는 고도성장기 재정정책의 전개와 그 사회경제적 의미를 구명해보고자 한다.[1)]

1) 서술의 편의 제고를 위해 이하 서술과정에서는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차 5개년계획’ 또는 ‘제1차 계획’ 등으로 명명하기로 한다.

II. 제2차 5개년계획기 이후 시기 재정정책의 전개와 사회경제적 귀결

당시 정부는 '제1차 5개년계획' 기간에 달성한 높은 경제성장에 고무되어 1965년 이래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대외의존적·수출주도적 불균형성장정책'에 대한 신뢰에 바탕을 두고,[2] 같은 기조의 '제2차 5개년계획'을 수립·집행해나가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1965년도에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된 불균형성장정책 기조는 1967년에 시작된 '제2차 5개년계획'에 그대로 이어졌을 뿐 아니라, 나아가 1972년에 시작된 '제3차', 그리고 1977년을 기점으로 하는 '제4차' 계획으로 까지 이어져 1979년 박정희 정부가 막을 내릴 때까지 우리나라 경제개발의 기본적인 정책기조로 틀을 굳혀나갔다. 이제 이하에서 제2차 5개년계획 이후 고도성장기에 전개된 재정정책의 내용을 먼저 "긴축과 확장의 맥락"에서 검토해보고, 나아가 그 이면에 내재되어 있는 실제 "정책운영의 구조적 특성"과 그 "사회경제적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1. 재정정책의 기조와 실제 운영성과 - 긴축과 확장정책의 맥락에서

(1)제시된 정책기조와 실제 운영성과에 나타난 정책방향의 괴리(乖離)

본고에서는 먼저 해마다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밝혀오고 있는 '시정연설'에 담긴 '재정정책의 기조'와 그러한 예산안에 바탕을 두고 실제로 재정을 운영한 결과 나타난 '재정정책의 방향'을 비교해봄으로써, 이 둘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사실을 보이고자 한다.

<표 1>의 '좌측'에는 각 년도의 정책기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해마다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시정연설'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한편 '우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당해 연도 실제 재정운영 결과 나타난 재정운영의 총량적 성과에 반영된 정책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 통합예산을 기준으로 재정규모의 GNP 대비 상대적 비율의 변화추세와 재정수지 적자의 크기를 기준으로 정책방향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제 <표 1>을 통해 우리나라 지난날의 경제개발 시기를 돌이켜보면, 고도성장 시기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늘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정책 기조를 천명해온 것을 볼 수 있다. 심지어 강력한 정권의 의지에 기대어 중화학공업화 시동을 걸고 있던 1973~1975년의 경우에도 '긴축', '안정된 기반',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등 안정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실제' 재정운영 성과를 보면, 각 시기 사회경제적 여건과 정부의 권력적 의지에 부응하여 긴축과 확장정책을 반복해왔으며, 그러는 가운데서도 고도성장 추진 모든 시기에 재정수지는 지속적으로 '재정적자'를 시현해왔음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공식적으로 내건 '정책방향'으로서 '긴축' 내지 '안정'은 일종의 정책적 수사에 불과했던 것으로서, 사실상 당시 권력이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의지 실현을 위해 그들의 의지와 다른 사회경제적 요구를 억압하기 위한 정치적 '명분' 내지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았던 것임을 알 수 있다.

(2) 실제 운영성과에 나타난 재정정책 방향의 근인(根因)

위와 같이 긴축과 확장이라는 총량적 정책방향만 가지고는 실제 그러한 정책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경제의 구조적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결국 총량적 규모면에서 나타난 재정정책의 방향이 갖는 실제 사회경제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실제 재정운영 과정에서 노정된 긴축과 확장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요인"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운영성과에 나타난 긴축과 확장과 같은 총량면에서의 당시 재정정책의 방향은 고도성장을 추구해나간 당시 권력의 '정책적 의지'에 의해 선험적으로 그 큰 방향이 정해졌으며, 그런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정책적 의지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경제가 직면하는 대내외적인 여건의 변화에 대응해가는 과정에서 매 시기별 약간씩 궤를 달리하면서 긴축과 확장정책을 반복해나간 것을 볼 수 있다. 이제 이러한 맥락에 바탕을 두고 이하에서 제2차 계획기 이후 고도성장기 실제 재정운영성과에 나타난 재정정책 방향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권력의 정책적 의지에 반영된 고도성장 지원을 위한 확장정책

각 시기 경제개발과정에서의 권력의 정책적 의지는 각 차수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제시된 목표 내지 주요정책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제2차 계획'은 기본목표를 "산업구조를 근대화하고 자립경제의 확립을 더욱 촉진"시키는데 두고, 이를 위한 구체적 과제로서 "공업고도화의 기틀을 잡는 한편 공업생산을 배가"하고, "7억 달러의 수출을 달성하고", "국민소득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등 의욕적인 성장추진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었다. 구체적인 GNP 성장률 목표는 애초에 기간 중 7%였던 것을 1968년에 들어서는 조정계획을 통해 10.5%로 올리는 등 전반적으로 수출증가를 통해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는데 정책적 의지를 나타내고 있었다.[3]

이어 추진된 '제3차 계획'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앞의 제1차 계획 후반기에 이은 제2차 계획 기간에도 고도성장 추진과정에서 구조적 문제가 파생된 것을 인식하여 지금까지와는 달리 그 기본정신을 「성장·안정·균형의 조화」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그 중점 목표는 여전히 "수출의 획기적 증대", "중화학공업의 건설"에 두고 계획기간 중 연평균 8.6%의 높은 경제성장을 추진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었다(경제기획원, 전게서, 115). 결국 제3차 계획은 "계획의 목표로 내세운 성장, 안정, 균형 중에서 역시 성장에 우선순

2) 제1차 5개년계획기의 불균형성장정책 방향의 설정 배경 및 동 시기 재정정책의 전개와 그 사회경제적 의미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우명동,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시기 재정정책의 전개와 역사적 시사점," 『나라재정』 2024년 2월호를 참고 바람.

3) 특히 이와 같이 원계획보다 성장률을 높게 잡고 추진해나가게 된 애초 배경이 "제1차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자신을 얻은 당시의 박정희 대통령이 1967년의 총선거를 위한 한 연설을 통하여 제2차 계획의 조기달성을 시사한 데서부터 비롯된"(경제기획원, 『개발연대의 경제정책』, 1982, 77) 것임을 고려해보면, 이 시기의 이와 같은 높은 성장지향은 당시 권력의 정책적 의지의 반영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가 두어졌다."[4] 한편 '제4차 계획' 또한 제3차 계획의 경우와 유사하게 기본적인 목표로는「성장·형평·능률」로 되어 있었지만, 형평, 능률 등의 목표는 부차적인 목표에 불과하였고 여전히 주요 정책내용은 성장중심으로 되어 있었다(강광하, 전게서, 74).[5]

종합컨대, 제2차 계획 이후 이어지는 5개년계획에서는 각 시기 시대상을 반영하여 약간씩 달리하는 당위적 목표를 제시하고는 있지만, 제4차 계획에 이르기까지 계획 차수를 달리하면서도 각 계획에서 제시되고 있었던 당시 정부의 '정책적 의지'는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추진"하는 데 두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재정정책 방향 또한 그러한 고도성장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짐으로써 지속적으로 재정규모를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재정수지 면에서 적자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여오고 있다.

2) 대내외여건 변화를 반영한 긴축과 확장정책의 반복

<표 1>과 <표 3>을 보면 위와 같이 고도성장을 향한 정책적 의지의 반영으로 제2차 계획기 이래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재정규모를 키워가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재정수지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적자를 시현해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재정규모의 변화추이를 보면, 같은 계획기간에서도 몇몇 시기는 증가추세를 더하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는 변화를 보여왔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향한 정책적 지향에도 불구하고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긴축과 확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당시 우리 사회경제가 직면하였던 대내외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데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먼저 제2차 계획기 전반부에는 그와 같은 고도성장을 향한 정책적 의지를 반영하여 확장재정에 의해 지원을 받아가면서 1969년까지 실질성장률도 목표치를 웃도는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제2차 계획기 전반부의 강력한 성장정책에 의해 높은 성장성과를 이루는 이면에서는 1969년에 이르면서 과잉투자로 인한 경기과열 현상을 보이고 그 과정에서 배태된 부실기업 문제와 같은 사회경제구조적인 문제가 불거져 나오자(주24 참고), 이러한 대내적 여건변화에 직면하여 몇 차례 안정화대책을 수립하는 등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안정기조로 전환하기에 이르렀다.[6] 이러한 정책전환은 재정정책의 방향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제2차 계획기 후반 1970년과 1971년에는 긴축재정정책을 시현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규모도 전반기에 비해 크게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다.[7]

제3차 계획기 이후에도 재정정책의 방향은 고도성장을 향한 정책적 의지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제2차 계획기와 맥을 같이 하여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재정규모를 늘려가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재정수지면에서 적자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여오고 있다. <표 1>을 보면 제3차 계획계획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GNP 대비 20% 전후 수준의 높은 재정규모를 시현해가면서 성장정책을 지원해나감으로써 꾸준히 10% 전후의 높은 성장성과를 보여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시기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위와 같은 고도성장을 향한 당시 권력의 정책적 의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의 재정정책의 방향은 그때그때 우리사회가 처한 대내외적 여건의 변화에 의해 긴축과 확장을 반복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3차 계획 출범 초년도였던 1972년에는 1969년 이래의 부실기업 문제 등 사회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안정화조치에 이어서 8월에는 획기적인 '8·3조치'를 취하여 그 사이에 노정되었던 문제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고자, 1970~1971년 이어져 온 긴축국면을 전환하여 재정규모를 크게 증가시켜 적극적인 재정운영을 펼쳤다. 한편 1973년에는 1971년 미국 닉슨대통령의 달러화의 금태환정지 선언 이후 국제정치경제질서의 재편과정이 불러온 보호무역주의와 그 과정에서 촉발된 '제1차 석유파동'에 직면해서 긴축정책으로 다시 정책기조를 전환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1974년 1월14일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를 발표하여 정책기조 전환을 시도하였다. 이리하여 제3차 계획은 1973년 세계적인 불황과 '제1차 석유파동'을 맞아 잠시 주춤하였으나, 세계경제의 호조와 '중동붐'을 계기로 조속하게 회복세를 타면서 1974년 이래 연이어 더욱 확장적 재정정책에 의한 지원을 받으면서 기존의 성장전략을 더욱 강화해나갔다. 물론 이렇게 이 시기에 이어진 확장정책은 반드시 이와 같은 대외적 배경의 변화에만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전술한 바와 같이 '중화학공업화정책'의 본격적 추진을 향한 당시 권력의 정책적 의지가 뒷받침이 되고 있었음은 물론이다(주4 참고). 그러나 이와같은 재정규모 확장세는 1975년을 정점으로 확장세를 다소 완화시켜 가는 변화를 보이고는 있었으나, 기본적으로는 여전히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1977년 제4차 5개년계획기를 맞이해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1978년 후반기에 '제2차 석유파동'을 맞아 재정확장 추세는 1979년에 다소 주춤하였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기존의 성장전략이 수정없이 그대로 추진되면서(주5 참고) 이어지는 1980년에는 석유파동의 여파에 국내정치적 혼란까지 겹친 가운데서도 재정수지 적자 폭을 늘려가면서 재정규모를 대폭 늘려나가고 있었다.[8]

4) 강광하, 『경제개발5개년 계획: 목표 및 집행의 평가』,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59 참고. 이러한 사실도 당시 중화학공업화 대상선정이나 제1차 석유파동과 같은 충격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중화학공업을 통한 성장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았던 당시 권력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유종호, "1970년대 중화학공업정책이 자본효율성과 수출경쟁력에 미친 영향," 『한국개발연구』, 13(1), 1991, 69; 박영구, "구조변동과 중화학공업화," 이대근 외, 『새로운 한국경제발전사』, 나남출판, 2005, 409 등 참고).

5) 이러한 제4차계획의 정책내용 또한 당시 권력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의 산물이었던 바, 이러한 사실은 박명호가 당시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의 박대통령의 발언내용을 정리하면서 밝히고 있는 사실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1979년 4월 안정화시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박대통령은 수출제일주의를 계속 밀고 나갈 것임을 다짐하였다"(박명호, "녹취록 심화연구의 배경 및 의의," 박명호·김두얼 외, 『수출진흥확대회의 녹취록 심화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14, 25).

6) 당시 정부는 1969년 11월 3일 '안정기반구축을 위한 종합대책', 1970년 1월 7일 '경제안정 12개 시책'을 수립하여 정부지출을 줄이고 통화공급을 억제하는 등 조치를 취해나갔던 바, 관련 내용은 한국은행, 『한국의 금융·경제연표』, 2000, 233, 235; 국회도서관, 『한국경제연표』, 1980, 33 등 참고바람.

7) 이러한 정책변화를 반영하여 총량적인 경제성과도 1969년 13.8%를 보였던 GNP 성장률이 1970년과 1971년에는 7.6%, 8.6%로 큰 폭으로 줄어드는 변화를 보이고 있음(<표 2>).

8) 이 시기 총량적 경제적 성과는 1974년 이래로 추진하던 중화학공업화정책이 자리잡는 과정에서 1975년까지 다소 부진한 국면을 보였으나, 이어지는 지속적인 지원전략의 추진과 이를 위한 확장정책의 지속으로 1976년 이래 다시금 높은 성장추세를 이어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78년 후반기에 제2차 석유파동을 맞아서는 재정규모는 계속 높은 추세를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금기야 1980년에는 총량적 성과가 그 동안 유례를 볼 수 없었던 높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기에 이르렀다.

[부표(附表)]

〈표 1〉 재정정책 기조와 운영방향

연도	시정연설에 나타난 재정정책 기조		재정운영 성과에 나타난 재정정책 방향			
	연설일자	재정정책 기조	재정규모		재정 수지	재정정책 방향
			GNP 대비 비중	전년 대비 증가율		
1966	65.10.19	• 재정자립 지향하는 균형예산	16.6	-	-4.0	-
1967	66.09.08	• 안정기조 견지 위한 균형예산	19.6	45.4	-2.8	확장 운영 적자 비중 크게 줄어듬
1968	67.10.16	• 균형예산	18.0	18.3	-1.5	긴축 운영 적자 비중 크게 줄어듬
1969	68.09.03	• 적정 규모의 건전 예산	21.8	58.6	-3.5	확장 운영 적자 비중 크게 늘어남
1970	69.11.25	• 건전 예산의 원칙 •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기하는 예산	18.4	8.8	-0.9	긴축 운영 적자 비중 크게 줄어듬
1971	70.09.02	• 안정기조 견지하는 건전예산	18.8	25.3	-2.2	유사한 정책기조 적자 비중 크게 늘어남
1972	71.09.02	• 건전재정 원칙을 견지한 검약예산	20.2	31.8	-4.6	확장 운영 적자 비중 크게 늘어남
1973	72.09.02	• 국민부담을 경감시키는 긴축예산	15.8	-0.2	-1.6	긴축 운영 적자 비중 크게 줄어듬
1974	73.10.04	• 안정된 기반 위의 고도성장 유지 • 중화학공업 개발 촉진 위한 예산	18.7	67.9	-4.0	확장 운영 적자 비중 크게 늘어남
1975	74.10.04	• 국내외 경제정세 감안하여 안정을 유지하면서 착실한 성장 추구	21.3	52.2	-4.6	확장 운영 적자 비중 조금 늘어남
1976	75.10.04	• 적정 성장을 달성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	20.9	34.8	-2.9	조금 긴축 적자 비중 크게 줄어듬
1977	76.10.04	• 각 부문간에 균형을 기하면서도 중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	20.6	25.8	-2.7	유사한 정책기조 적자 비중 유사함
1978	77.10.04	• 안정을 이룩하면서 선진공업국으로 도약 위한 기반 구축	20.8	36.6	-2.6	유사한 정책기조 적자비중 유사함
1979	78.10.04	• 안정기반 위에서 성장 지속	20.2	24.2	-1.4	유사한 정책기조 적자 비중 크게 줄어듬
1980	79.11.15	• 재정금융 긴축기조 견지	23.0	36.1	-3.2	확장 운영 적자 비중 크게 늘어남

주: 좌측의 재정정책 기조는 원칙적으로 시정연설에서 직접 언급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나, 직접적인 언급이 없는 경우는 연설내용 중에서 정책기조와 관련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바탕을 두고 추출하였으며, 우측의 재정정책 방향을 서술함에 있어서는 재정수지가 GNP 대비 1%이상 변동하면 '크게' 변화한 것으로, 그 미만 변동한 경우는 '조금' 변동 내지 '현상유지'한 것으로 서술하였음을 유념할 것.

자료1: 시정연설에 관한 자료는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재정정책사』,(제1권, 제2권), 1990; 국회회도서관입법조사국, 『역대예산관계자료(1961~1977)』, 1977 및 (1978~1984), 1985; 임동완, 『국가 및 지방재정 70년 주요변천사』, 국회예산정책처, 2018, 39-45; 48-55 등을 참고.

자료2: 재정성과자료는 〈표 3〉 참고

〈표 2〉 주요 경제지표 변화추이

연도	경제 총량 성과		통화량(M1)		물가지수			
	국민총생산 (억원)	실질 성장률	통화량 (억원)	증가율	도매물가		소비자물가	
					지수	상승률	지수	상승률
1966	10,370	12.7	851	29.7	10.85	8.8	9.84	11.4
1967	12,812	6.6	1,230	44.5	11.54	6.4	10.90	10.8
1968	16,529	11.3	1,779	44.6	12.48	8.1	12.08	10.8
1969	21,553	13.8	2,520	41.7	13.32	6.7	13.58	12.4
1970	26,840	7.6	3,076	22.1	14.54	9.2	15.73	15.8
1971	34,167	8.6	3,580	16.4	15.80	8.7	17.86	13.5
1972	41,912	5.1	5,194	45.1	18.00	13.9	19.95	11.7
1973	53,763	13.2	7,303	40.6	19.25	6.9	20.58	3.2
1974	75,974	8.1	9,457	28.5	27.36	42.1	25.58	24.3
1975	101,358	6.4	11,817	25.0	34.61	26.5	32.10	25.5
1976	139,127	13.1	15,440	30.7	38.80	12.1	37.00	15.3
1977	178,066	9.8	21,726	40.7	42.30	9.0	40.70	10.0
1978	240,016	9.8	27,138	24.9	47.25	11.7	46.60	14.5
1979	308,018	7.2	32,745	20.7	56.09	18.7	55.10	18.2
1980	367,497	-3.7	38,070	16.3	77.96	39.0	70.90	28.7

주: 물가지수는 1985년 100 기준 지수임. 국민총생산 1971년 이후는 신국민경제체계에 의함.
자료: 경제성장률: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재정40년사』(제4권), 1991, 4.
통화량: 같은 책, 14.
물가지수: 1985년 기준, 같은 책, 10.

〈표 3〉 재정규모와 재정수지 보전내역

연도	세입 합계	세출& 순융자	수지 차	GNP	보전재원			
					순차입		외국원조	현금잔액
1966	1,311	1,724(16.6)[-]	-413(-4.0)	10,370	122		311	-20
1967	2,155	2,507(19.6)[45.4]	-352(-2.8)	12,812	164		279	-90
1968	2,725	2,967(18.0)[18.3]	-242(-1.5)	16,529	-33		333	-58
1969	3,946	4,707(21.8)[58.6]	-761(-3.5)	21,553	503		233	24
					한국은행	국채	해외차입	기타
1970	4,876	5,123(18.4)[8.8]	-247(-0.9)	27,850	35(14.2)	27(10.9)	266(107.6)	-81
1971	5,657	6,421(18.8)[25.3]	-764(-2.2)	34,167	-59(-7.7)	73(9.6)	712(93.2)	38
1972	6,540	8,465(20.2)[31.8]	-1,925(-4.6)	41,912	1,186(61.6)	251(13.0)	500(26.0)	-12
1973	7,577	8,447(15.8)[-0.2]	-870(-1.6)	53,763	492(56.6)	55(6.3)	599(68.9)	-276
1974	11,177	14,186(18.7)[67.9]	-3,009(-4.0)	75,974	1,914(63.6)	465(15.5)	790(26.3)	-160
1975	16,925	21,586(21.3)[52.2]	-4,661(-4.6)	101,358	2,671(57.3)	805(7.3)	1,432(30.7)	-247
1976	25,114	29,097(20.9)[34.8]	-3,983(-2.9)	139,127	1,300(32.6)	1,729(43.4)	2,255(56.6)	-1,301
1977	31,849	36,605(20.6)[25.8]	-4,756(-2.7)	178,066	999(21.0)	1,469(30.9)	2,793(58.7)	-505
1978	43,852	50,011(20.8)[36.6]	-6,159(-2.6)	240,016	1,102(17.9)	2,917(47.4)	3,592(58.3)	-1,453
1979	57,698	62,101(20.2)[24.2]	-4,403(-1.4)	308,018	-1,558(-35.4)	3,605(81.9)	2,663(60.5)	-307
1980	72,808	84,545(23.0)[36.1]	-11,737(-3.2)	367,497	2,650(22.6)	2,742(23.4)	3,177(27.1)	3,168

주1: 1970년 이후 재정관련 수치는 재무부 『결산개요』 자료로서, 중앙정부 통합재정 기준임(중앙정부와 공기업을 합한 수치로서 내부거래를 차감한 순계기준임). 1966~1969년 자료는 1970년도 이후와 같은 시리즈 자료가 없어서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에 나오는 중앙정부 재정수지 자료를 원용하고 있는 바, 이는 한국은행 중앙정부 자료에도 정부기업 순계를 포함하고 있어 재무부의 중앙정부 통합재정과 유사한 기준으로 판단한 데 기인함.
주2: 1967~1969년의 '순차입'은 한은차입순계, 재정차관순계, 국채발행순계를 모두 포함한 수치이며, '외국원조' 항은 대충자금, 대충자금예금증감, 파월경비지원수입으로 구성됨. 1970년 이후의 '기타'는 時在사용, 예금은행 차입 등을 나타냄.
주3: 금액 단위 억원이며, 세출 및 수지차 ( ) 수치는 GNP 대비, 보전재원 항 ( ) 수치는 수지차 대비 비중. [ ]안 수치는 전년대비 증가율을 나타냄.
자료: 1967~1969: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각 연도; 1970~1980: 재무부, 『결산개요』, 1981(KDI, 『재정통계자료집』, 1983, 44).

〈표 4〉 중앙정부 일반재정 세입 및 세출 구성

연도	세입합계	조세	전매익금	세외수입·기타	재정차관	국채·차입금	대충자금	파월지원
1966	153.777	87,646(57.0)	7,500(4.9)	17,093	3,123(2.0)	0	38,415(25.0)	0
1967	199,018	129,241(64.9)	10,000(5.0)	16,711	5,027(2.5)	0	35,238(17.7)	2,801(1.4)
1968	275,717	194,288(70.5)	16,400(5.9)	26,611	5,000(1.8)	0	30,655(11.1)	2,763(1.0)
1969	376,041	262,823(69.9)	24,250(6.4)	32,540	32,527(8.6)	0	21,868(5.8)	2,033(0.5)
1970	445,856	334,723(75.0)	30,100(6.8)	28,734	28,600(6.4)	0	17,696(3.9)	6,002(1.4)
1971	551,452	407,683(73.9)	45,372(8.3)	33,757	43,690(7.9))	0	12,189(2.2)	8,760(1.6)
1972	706,882	433,446(61.3)	42,900(6.1)	35,098	88,740(12.6)	22,500 72,500	4,399(0.6)	7,300(1.0)
1973	691,101	521,492(75.5)	57,000(8.2)	38,562	71,179(10.3)	-	-	2,868(0.4)
1974	1,049,759	844,673(80.5)	69,000(6.6)	53,886	39,800(3.8)	- 42,400	-	-
1975	1,632,047	1,255,479(76.9)	135,500(8.3)	83,933	142,135(8.7)	- 15,000	-	-
1976	2,398,898	1,914,747(79.8)	178,000(7.4)	164,901	141,250(5.9)	-	-	-

연도	세출 합계	일반경비	국방비	투융자	기타
1966	140,942	59,169(42.0)	40,542(28.8)	40,684(28.9)[-]	547
1967	180,932[28.4]	84,721(46.8)	49,553(27.4)	46,108(25.5)[13.3]	550
1968	262,064[44.8]	116,404(44.4)	64,708(24.7)	80,302(30.6)[74.2]	650
1969	370,532[41.4]	153,843(41.5)	84,382(22.8)	131,656(35.5)[64.0]	651
1970	441,329[19.1]	189,798(43.0)	102,335(23.2)	148,566(33.7)[12.8]	630
1971	546,278[23.8]	233,600(42.8)	134,738(24.7)	177,350(32.5)[19.4]	590
1972	701,143[28.3]	286,543(40.9)	173,909(24.8)	240,191(34.3)[35.4]	500
1973	651,586[-7.1]	291,367(44.7)	183,469(28.2)	176,750(27.1)[-26.4]	-
1974	1,018,872[56.4]	420,953(41.3)	296,846(29.1)	301,073(29.5)[70.3]	-
1975	1,550,214[52.2]	585,516(37.8)	442,438(28.5)	522,260(33.7)[73.5]	-
1976	2,170,535[40.0]	797,267(36.7)	703,753(32.4)	669,515(30.8)[28.2]	

주1: 당시 '일반재정' 기준 자료가 공개되고 있는 1976년까지의 자료임.
주2: 단위 백만원. ( )안 수치는 총세입 및 총세출 대비 비중을 나타내며, [ ]안 수치는 전년 대비 증가율 나타낸 것임.
주3: 세외수입·기타는 세외수입, 이자수입 등을 포함.
주4: 일반경비에는 봉급 및 연금, 일반행정비, 지방재정교부금, 채무상환 등을 포함.
자료: 1966~1972: 재무부, 『결산개요』, 각 연도(한국개발연구원, 『한국재정40년사(4권)』, 1991, 63~69).
1973~1976: 재무부(경제기획원, 『경제백서』, 각연도)(세출항목 구분을 맞추기 위해 앞 연도와 출처 달리하였음)

〈표 5〉 재정투융자 추이와 경제발전기여도

연도	GNP	국내 고정 자본 형성	재정규모		재정투융자					재정융자				재정 투융자 대비 비중
			금액	對 GNP 비중	금액	전년대비 증가율	對 GNP 비중	고정자 본형성 대비 비중	재정 규모 대비 비중	금액	對 GNP 비중	고정자 본형성 대비 비중	재정 규모 대비 비중	
1966	10,370	2,098	2,310	22.3	626	112.2	6.0	30.0	27.1	141	1.4	6.7	6.1	22.5
1967	12,812	2,746	2,912	22.7	790	26.2	6.2	28.8	27.2	197	1.5	7.2	6.8	24.9
1968	16,529	4,136	4,028	24.4	1,176	48.9	7.1	28.4	29.1	162	0.9	3.9	4.0	13.8
1969	21,553	5,558	5,780	26.8	1,756	49.3	8.2	31.6	30.4	383	1.8	6.9	6.6	21.8
1970	26,840	6,541	5,977	22.3	1,843	5.0	6.9	28.2	30.8	289	1.1	4.4	4.8	15.7
1971	32,948	7,424	7,320	22.2	2,133	15.7	6.5	28.7	29.1	420	1.3	5.7	5.7	19.7
1972	40,289	8,285	9,631	23.9	3,098	45.2	7.7	37.4	32.2	344	0.9	4.2	3.6	11.0
1973	52,383	12,556	9,602	18.3	2,716	-12.3	5.2	21.6	28.3	526	1.0	4.2	5.5	19.4
1974	73,325	18,706	14,283	19.5	4,762	75.3	6.5	25.5	33.3	1,136	1.5	6.1	8.0	23.9
1975	97,929	25,440	21,236	21.7	8,057	69.2	8.2	31.7	37.9	1,820	1.9	7.2	8.6	22.6
1976	132,726	31,524	28,952	21.8	10,532	30.7	7.9	33.4	36.4	2,258	1.7	7.2	7.8	21.4
1977	170,214	44,209	37,178	21.8	12,596	19.6	7.4	28.5	33.9	3,217	1.9	7.3	8.7	25.5
1978	229,176	70,231	47,816	20.9	16,797	33.4	7.3	24.0	35.1	5,322	2.3	7.6	11.1	31.7
1979	290,721	94,582	64,665	21.1	26,414	57.3	9.1	28.0	40.8	6,448	2.2	6.8	10.0	24.4
1980	350,306	110,939	86,478	23.1	29,193	10.5	8.3	26.3	33.8	7,733	2.2	7.0	8.9	26.5

주1: 재정규모는 1976년도 까지는 일반재정 및 기타특별회계 순계 결산액임.
1977년도 이후 수치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계 결산액임.
주2: 금액 단위는 억원임.
자료: 재무부, 『재정투융자백서』, 1982, 41, 46, 53, 60.

〈표 6〉 예금 및 대출 이자율

연월	예금 이자율	대출 이자율		
	정기예금	상업어음 할인율	정책금융금리(일부)	
			수출어음 할인율	기계공업육성자금
1965. 9	30.0	24.0	6.5	-
1967. 6	30.0	24.0	6.0	-
1969. 6	22.8	24.6	6.0	12.0
1971. 6	21.3	22.0	6.0	12.0
1973. 5	12.6	15.5	7.0	10.0
1975.10	15.0	15.5	7.0	12.0
1977.10	14.4	15.0~18.0	8.0	13.0
1979. 9	18.6	18.5	9.0	15.0

주1: 제2차계획기 이후 추세를 보기 위해 대출이자율 변화 시점을 기준으로 2년 단위로 예금이자율과 대출이자율을 비교한 표임.
주2: 정기예금 이자율 30.0%는 1965.09.30. 금리현실화 조치 이후 1968.4.1.일까지 적용되었던 이자율이며, 기계공업육성자금에 대한 대한 정책금융은 1968년부터 시작되었음.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각연도.

〈표 7〉 산업별 성장률

	실질경제성장률	농림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기타
1966	12.7	11.6	15.4	13.0
62-66 연평균	7.8	5.6	14.3	8.4
1967	6.6	-5.9	20.2	13.1
1968	11.3	1.3	23.4	15.5
1969	13.8	10.5	19.2	14.4
1970	7.6	-1.4	19.6	8.1
1971	9.4	3.7	17.3	9.8
67-71 연평균	9.7	1.5	19.9	12.6
1972	5.8	2.0	12.9	5.0
1973	14.9	6.3	28.6	13.6
1974	8.0	6.7	15.2	5.1
1975	7.1	5.3	12.6	5.1
1976	15.1	10.7	21.5	13.7
72~76 연평균	10.1	6.1	18.0	8.4
1977	10.3	2.1	14.3	11.9
1978	11.6	-4.0	20.0	13.5
1979	6.4	6.7	9.4	4.1
1980	-5.7	-22.0	-1.2	4.1
77-80 연평균	9.2	4.0	14.2	7.6

주: 성장률은 1975년 불변가격 기준임.

자료: 경제기획원, 『주요경제지표』, 1980(재무부, 『재정투융자백서』, 1982, 38, 43, 47,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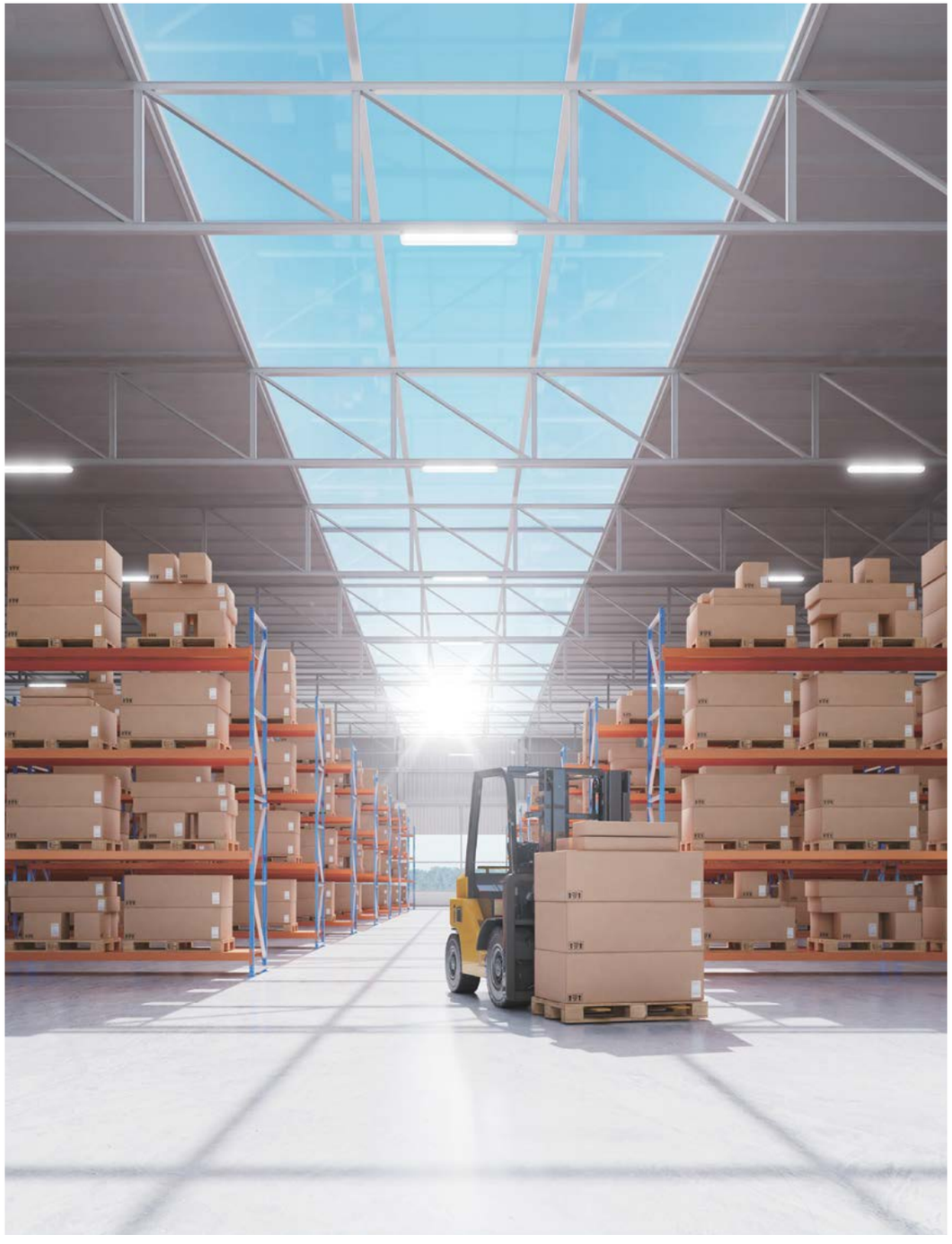
〈표 8〉 법인기업 유형별 유효한계세율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HC群	39.2	34.9	27.7	33.5	29.9	15.9	18.0	17.5	16.9	18.6	18.3
Light群	39.4	34.7	29.8	38.6	37.7	52.1	51.0	49.5	48.4	48.5	48.8

주: HC군 산업은 화학, 1차금속, 일반기계, 전기계와 운송기계 세율의 단순평균값이며, Light군 산업은 식료 및 실료품, 섬유·의료 및 피혁, 나무제품 및 가구제품, 기타 제조업의 단순평균값임.

자료: 곽태원, "감가상각제도와 자본소득과세," 연구보고 85-05, 한국개발연구원, 1985의 〈표3-5〉 내용을 재분류해서 작성한 유정호, "1970년대 중화학공업정책이 자본효율성과 수출경쟁력에 미친 영향, 『한국개발연구』, 13(1), 1991의 〈부표 1〉에서 작성.

[7월호에 이어집니다]



특정 영화의 스크린 독점, 이것도 독점일까?

남시훈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10년전 2014년 영화 <명량>의 1700만 명을 넘어서는 기록적인 흥행 이후, 한국 영화계에서 천만 영화가 나올 때마다 '스크린 독점' 논란이 등장하고 있다. 영화가 개봉할 때 특정 영화가 워낙 많은 스크린에서 많은 상영회수를 기록하는 것이 '독점'이고 그 덕분에 영화가 상업적 성공을 하니 이것은 불공정 경쟁이며, 다른 영화를 보기가 어려워지므로 '스크린 독점'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을 해석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세 가지 포인트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첫 번째는 특정 영화가 실제 영화 상영을 어느 정도 차지했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다른 영화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가 하는 부분이다. 두 번째는 이러한 현상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독점의 문제와 연관이 있는지 하는 부분이다. 세 번째로는 외국의 관련 사례를 확인해 보려고 한다.

2024년에 스크린 독점 논란을 일으킨 영화는 <범죄도시 4>이다. 범죄도시 4는 개봉 첫 주인 4월 24일부터 30일까지 전체 상영 횟수의 80%를 넘는 상영 횟수를 차지했다. 즉 다른 영화들을 다 합쳐도 전체 상영 횟수의 20% 이하, 범죄도시의 1/4이 안되는 것이다. 다른 영화를 보려고 해도 보기가 어려웠다는 일부 영화팬들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상영횟수가 불공정하게 결정되었다는 근거는 부족하다. 영화관 측에서는 <범죄도시 4>가 인기가 제일 많았기 때문에 많이 상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주장이 상영 횟수와 좌석 대비 관객의 입장 숫자, 즉 좌석 판매율로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문제의 4월 마지막 주 <범죄도시 4>의 판매율은 39.3%였던 반면 다른 10위권 내 영화들은 높은 경우 23%, 낮은 경우 7% 정도에 그쳤다. 특히 2024년 상반기 3월에서 5월, <범죄도시 4>와 <파묘>가 흥행을 리드했던 기간을 제외하면 매주 TOP10 영화들의 좌석 판매율은 10%에서 15%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관객들이 편하게 영화관을 찾고 개봉영화 중에서 영화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특정한 인기 있는 영화를 보기 위해 그 영화가 상영할 때만 영화관을 찾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스크린 싹쓸이 현상은 "독점"인가? 경제학적으로 독점은 한 가지 상품이 단기간 많이 팔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교차탄력성을 기준으로 독립된 상품을 특정 기업이 유일하게 생산하거나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유지할 때 독점에 해당한다. 독점기업은 상품의 가격을 독점기업에 유리하게 높게 조정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손실을 발생시킨다. 즉 스크린 싹쓸이 현상은 독점이라고 부르기 어렵다. 한국 영화계는 여러 영화배급업체들이 돌아가면서 히트작을 내고 있고, 영화관 대부분은 3개 멀티플렉스 대기업의 점유율이 매우 높으므로 이는 과점에 해당한다. 과점 역시 담합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현재 영화계의 문제가 <범죄도시 4>의 독점이 문제인가? 라고 질문하면 그렇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다. 문제의 성격이 다르다. 상품 시장에서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독점적 경쟁 이론 및 국제무역이론에서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상품을 접할수록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키며 국제무역을 할 경우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통해 상품의 다양성이 높아져 소비자의 만족도도 올라간다고 본다. 이것은 국제무역의 주요한 혜택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것은 독점이 일으키는 문제와는 다른 문제이며, 스크린 싹쓸이 현상을 물리적으로 규제한다고 해도 다양성이 충분히 확보된다는 보장은 없다.

예술계에서 특정 영화의 스크린 점유율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정한 근거가 있는데, 바로 외국 영화계에서는 스크린 싹쓸이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여러 국가가 자체 배분 내지는 강력한 스크린 분배 정책을 통해 특정 영화의 프라임시간대의 상영 횟수를 25%에서 50% 정도로 제한한다. 따라서 한국처럼 영화가 인기가 있어도 50% 이상을 상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한국의 현재 영화계에 스크린 점유율 규제를 도입하면 현재 상황이 개선될까? 이를 위해서는 정책의 목적을 무엇으로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영화계에 다양성을 확보하고, 좋은 영화는 장기간 상영되면서 인기를 모아 발굴될 수 있어야 하며, 그러면서도 영화산업 전체의 수익성, 관객 확보 역시 중요하다. 문제는 스크린 점유율 규제가 다양성 확보에 도움이 될지는 불확실한 반면 영화산업 전체의 관객 확보에는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상당하다는 점이다. 다양성을 확보하려면 1위 영화에서부터 10위 영화 그 이하까지 다양하게 점유율이 늘어나야 하는데, 1위 영화의 점유율을 줄인다고 해서 극적으로 6위 이하의 영화들의 점유율이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다. 적당히 2위 3위 영화의 상영 횟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높으며 전반적인 다양성 확대에 크게 기여한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 현재 한국 영화계는 과점 문제를 안고 있으며, 멀티플렉스를 과점하고 있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영화 배급에도 적극적으로 큰손이 되면서 수직계열화 문제도 두드러지게 안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연구 결과 중에서는 CGV에서 배급하는 영화는 CGV에서 보다 많이 상영 횟수를 차지하게 되는 문제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밝힌 논문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관객들이 외면한 영화에 대해 많은 상영 횟수를 배정하기는 어렵다. 그만큼 영화관 입장에서는 매출 감소로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즉 어느 정도는 관객들의 수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스크린 편성에 규제를 도입할 경우 영화업체들의 매출 감소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실제로 영화계에 있어서 작품성과 흥행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흥행에 있어서는 마케팅 전략 역시 중요하게 작용한다. 스크린 편성을 규제할 경우 다른 영화들을 보는 관객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인기 영화를 보기 어려워 영화관에 가지 않는 관객들이 나타난다면 전체 관객 숫자에는 마이너스가 된다. 실제로 <범죄도시 4>의 경우 범죄도시 시리즈의 후속작인 만큼 처음부터 기대치가 높아서 바로 첫 주에 상영점유율 80%를 넘어섰지만, 비교적 서서히 관객들이 모여든 <파묘>와 <서울의 봄>의 경우에도 상영점유율이 50%를 넘어섰다. 이러한 대히트 영화의 점유율을 제한하는 것은 영화제작에 투자하는 업체 입장에서 기대수익에 악영향을 준다.

<범죄도시 4>의 경우 개봉 첫 주에 전세계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으며, 주말 성적이 2400만 달러를 넘기면서 2위인 <고질라X콩: 뉴 엠파이어>의 1,490만 달러를 꽤 큰 차이로 따돌리면서 1위에 올랐다. 이렇게 영화가 성공하면 대단히 높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을 오히려 한국 영화계의 강점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영화 역시 산업인 만큼 꾸준히 수익을 내고 이를 통해 투자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 시기 이후 한국 영화의 전체적인 관객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시기에 이런 부분은 더 중요하다. 코로나 시기 이전에는 가볍게 영화를 찾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스크린 독점 규제의 역기능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으나, 넷플릭스와 티빙 등 OTT, 그리고 유튜브의 활성화로 볼거리가 많아진 코로나 이후 시기에는 영화 관객 숫자 및 영화산업 자체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기에, 더 조심스러워야 한다. 본문에서는 스크린 독점 규제의 위험성을 위주로 서술했지만, 그렇다고 현재 한국 영화계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영화가 더 만들어지고, 잘 만든 영화들이 발굴되기 쉽게 만드는 시스템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슬라이딩 시스템'에 따라 극장은 개봉 초기에 적은 몫을 가져가고 개봉 3~4주 차로 시간이 늦어질수록 수익을 배분받는 비율이 더 올라가게 되어 있다. 즉 인센티브 구조 자체가 영화의 장기 상영을 유도하게끔 설계된 것이다. 그 외에 독립영화 등 다양한 영화에 대한 정책적 지원 혹은 대박 영화의 수익금 분배 시스템 등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있다.

좋은 의도를 가진 정책이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범죄도시 4>의 대흥행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쉽지만, 표면적인 정책만으로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없다. 목적을 잘 설계하고 문제를 잘 파악하고 얽힌 매듭을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란이 주는 또 다른 시사점은 대중들이 생각하는 경제학 용어의 의미가 실제 학문적 의미와 다르다는 것이다. 독점이라는 단어 외에도, 공공재, 도덕적 해이 등 대중들이 용어를 다른 뜻으로 사용하고 그 결과 잘못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우는 꽤 자주 발견된다. 좋은 정책을 수립하려면 좋은 정책을 개발하는 것에 더하여 전문가들이 전문가와 대중 이해의 차이 폭을 좁히기 위해서 꾸준히 소통하고 노력할 필요도 있다.

경제를 보는 눈을 길러주는 재정·경제 도서 추천

세계 경제의 변화 속에서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 있는 시각을 책을 통해 배워보자.

7번의 대전환_ 세계 경제 흐름을 뒤바꾼



▲ 왜 어떤 위기는 경제를 붕괴시키고, 어떤 위기는 경제를 번영하게 하는가?

해롤드 제임스(지은이) ● 21세기북스

책 속으로

질병이 확산하자 경제와 금융 부문에 즉시 빨간불이 켜졌다. 정책 목표는 혼란에 빠진 상태를 그대로 드러냈다. 이 문제들을 동시에 다 처리해야 하는 거냐는 의문이 있었다. 봉쇄가 시작되자 공급은 더 어려워졌다. 경제가 침체할수록 팬데믹은 더 악화할 수 있는데, 경기침체가 빈곤층에 특히 큰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빈곤층은 비좁은 주거 공간, 열악한 위생 상태 및 오염물질에 대한 노출 때문에, 전염병에 매우 취약하다. 각종 제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훨씬 더 증가했다.

〈7번의 대전환〉은 프린스턴대학교 교수이며 국제통화기금(IMF)의 공식 역사가이기도 한 경제사학자 해롤드 제임스가 지난 200년간의 경제사를 통틀어 경제와 금융 시스템에 대전환을 가져온 지점들을 제시하는 책이다. 반복되는 위기에서 깨달음을 얻고 다음을 예측할 수 있도록, 단순히 시대를 고찰하는 것을 넘어 각 위기를 대하는 위대한 경제학자와 정치 지도자들의 행적까지 좇는다. 마르크스, 스탠리 제번스, 하이에크, 레옹 발라스, 존 메이너드 케인스, 카를 멩거, 밀턴 프리드먼, 벤 버냉키, 래리 서머스, 라즈 체티는 위기 상황에서 어떤 경제적 사고를 하고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그리고 그들의 결정은 지금 어떤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가?

금융위기는 겉으로 보기에 경제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실물 경제를 공황 상태로 몰아넣는다는 점에서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깊이 파고 들어가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1970년대 석유 파동과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완전히 다른 성격이다. 전자는 공급 부족으로 촉발된 붕괴로서 각국의 자원 확보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경제 세계화가 촉진되었고, 후자는 수요 부족으로 인해 촉발된 위기로서 시장이 위축되고, 긴축 조치가 시행되었으며, 정부에 대한 회의론이 커짐에 따라 세계화가 약화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지난 200년간 세계 경제를 뒤흔든 7번의 굵직한 전환점을 다루면서 세계 경제에 도움을 준 '좋은 위기'와 세계 경제를 공황에 빠뜨린 '나쁜 위기'를 구분한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까지 제시한다.

챗봇 2025 트렌드&활용백과



▲ 챗봇 네이티브 시대를 미리 준비하는 최고급 코스!

김덕진, 서승완(지은이) ● 스마트북스

책 속으로

2013년 개봉한 영화 「그녀(Her)」는 AI와 사랑에 빠진 한 남자의 이야기이다. AI가 대중화된 가까운 미래를 로맨스와 연관시켜 신선하게 그려냈다. 낭만적인 편지를 대필해 주는 전문작가인 주인공 테오도르는 AI '사만다'와 놀라운 정서적 연결을 경험한다. 사만다는 테오도르의 개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별화된 대화와 반응을 제공했고, 테오도르는 그런 사만다와 깊은 사랑을 공유한다. 결말은 다소 싱겁게 끝나지만, AI와 인간의 감정적 유대가 어떤 형태도 발전할 수 있을지, 제법 많은 상상력을 자극한다. 그런데 이런 「그녀」의 시나리오가 이제는 영화 속 이야기만이 아니게 된 것 같다. AI 서비스가 점차 대중화되며 비슷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챗봇 2025_트렌드&활용백과〉는 국내 최고의 IT 커뮤니케이터 김덕진 소장과 프롬프트 엔지니어 서승완 대표가 주목할 만한 챗봇 트렌드부터 당장 써먹을 수 있는 GPT 챗봇 60개의 활용법을 상세히 소개한다. AI에 대해 '무엇을'이 아니라 '어떻게'를 질문할 때인 지금, AI 챗봇은 일의 미래를 보여준다. AI의 발전 속도는 무섭다. 이제는 매번 프롬프트를 길게 쓸 필요도 없어졌다. 오픈AI가 챗GPT 멘션 기능을 탑재함으로써, 챗GPT에서 내 요구에 딱 맞는 GPT 챗봇을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회의록 작성' 챗봇, '보고서 작성기' 챗봇, '마케팅 전략' 챗봇, '통계 분석' 챗봇, 이미지 생성 '미드저니 자판기' 챗봇 등, 필요에 따라 전문가 챗봇들을 불러와서 원하는 주제만 입력하거나 마우스 클릭만으로도 된다. 마치 내 책상 위에 전문가 AI 챗봇들을 불러다 놓고 조수로서 부리는 것과 같다. 게다가 이제는 누구나 손쉽게 내 회사, 업무, 취미에 딱 맞는 맞춤형 GPT 챗봇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기존의 챗봇은 전문적인 코딩 능력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코딩을 하나도 몰라도 누구나 자신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담은 맞춤형 챗봇을 손쉽게 만들 수 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노력과 열정을 쏟는다면, 단순히 취미생활을 넘어 수익화로 연결되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도 꿈이 아니다. 스마트폰 앱 생태계와 같은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열리고 있다.

2024년 5월 공개된 '전체를 아우른다'는 뜻의 Omni에서 이름을 따온 GPT-4o는 기존 모델보다 훨씬 빠르면서 똑똑한 멀티모달 AI이다. 마치 실제 사람과 대화하는 것 같은 경험을 제공하고 카메라로 보이는 장면을 바로 분석해 등장인물 · 상황을 고려한 응답을 해준다. GPT-4o의 강력한 멀티모달 능력과 GPTs 서비스의 맞춤형 챗봇 생성 능력이 결합하면, 내 업무에 꼭 맞는 맞춤형 챗봇이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최근 공개된 GPT-4o 멀티모달, 챗봇을 만드는 GPTs 서비스 한글판 최신 업데이트 내용을 반영했다. 질문이 바뀌면 결과가 바뀐다. 내 업무 맞춤형 AI 챗봇을 만들기 위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기본구조와 아울러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한 템플릿 기법들을 소개한다. '홍보기사' 템플릿, 'SNS 홍보 게시물' 템플릿, '고객 리뷰 자동 답글' 템플릿 등 일잘러를 위한 프롬프트 실습 예제, 마법의 프롬프트 단어 등 알짜배기 노하우가 가득하다.

JUNE

2024
6

국 제

-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경 제

- 한국은행 2024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발표
- 통계청 2024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2024 재정전략회의 개최 (기획재정부.5.17.)

- '24~'28 중기재정운용 및 '25년 예산편성 방향 논의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당면한 민생 과제 등 정부가 할 일에는 충실히 투자할 계획
- ①민생안정, ②역동경제, ③재정혁신, 등 3개 세션별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국무위원 간 논의 진행
- 약자복지 강화 및 의료개혁 추진방안, 청년 미래 도약 지원방안, 지역 교통격차 해소 투자방안, 선도형 R&D로의 개혁,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지원, 저출생 대응 지원 및 효과성 제고, 지방교육 재정혁신 방향 등에 대한 토론 진행

통화정책방향 발표 (한국은행, 5.23.)

-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
- 물가상승률은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성장세 개선, 환율 변동성 확대로 인한 물가 상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되는 만큼 현재 긴축 기조 유지 및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

국민계정 2020년 기준년 1차 개편 결과 (2000~23년) (한국은행, 6.5.)

- 한국은행은 국민경제의 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여 국민계정 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5년마다 기준년 개편 실시
- 기준년 변경(2015년→2020년) 및 경제규모 조정, 2020년 명목GDP(신계열) 규모는 2,058조원으로 구계열(1,941조원)에 비해 118조원 확대(베이스업 률 6.1%)
- 2020년 1인당 국민총소득(신계열 GNI, 미달러화 기준)은 33,929달러로 구계열(32,004달러)에 비해 1,925달러 증가,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 미달러화 기준)은 19,322달러로 구계열(17,953달러)에 비해 1,369달러 증가

1월

재정
- 2025년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재정부)
- 2023년 세법개정후속 시행령 개정

경제
- 통계청 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발표

국제
-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발표
- 국제통화기금(IMF) 수정경제전망 (WorldEconomic Outlook update)발표

2월

재정
- 2023년 총세입·총세출 마감
- 2023년 결산보고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재정부)

경제
- 한국은행 2023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 총생산(속보) 발표

국제
- OECD 중간경제전망 (Interim Economic Outlook)발표

3월

재정
- 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기획재정부→각 중앙관서)

경제
- 한국은행 2023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발표

4월

재정
- 2023년 결산 검사 의뢰 (기획재정부→감사원)

경제
- 한국은행 2024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발표

국제
-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WorldEconomic Outlook)발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 발표

5월

재정
-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 2025년 예산요구서 제출(각 중앙관서→기획재정부)
- 2023년 국가결산보고서 제출(정부→국회)
- 2023년 기금운용평가결과 발표
- 2023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발간

경제
- 통계청 2024년 1/4분기지역경제동향 발표
- 통계청 2024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발표

국제
- OECD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발표

6월

경제
- 한국은행 국민계정 2020년 기준년 1차 개편(2000~23년)
- 한국은행 2024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발표
- 통계청 2024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국제
-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7월

재정
-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경제
- 한국은행 2024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 발표
- 통계청 2024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발표

국제
- 국제통화기금(IMF) 수정경제전망 (WorldEconomic Outlook update)발표

8월

재정
- 2025년 국유재산종합계획 제출

경제
- 통계청 2024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 한국은행 경제전망 발표

9월

재정
- 2025년 예산안 제출(정부→국회)
-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경제
- 한국은행 2024년 2/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국제
- OECD 중간경제전망 (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10월

경제
- 한국은행 2024년 3/4분기 실질국내총생산(속보) 발표

국제
-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WorldEconomic Outlook)발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 발표

11월

경제
- 통계청 2024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국제
- OECD 경제전망보고서 (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12월

재정
- 2025년 예산 확정

경제
- 한국은행 2024년 3/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애독자 코너

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월간 <나라재정>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간 <나라재정>을 즐겁게 읽으셨다면 특별히 기억에 남는 페이지의 간단한 느낌을 적어
애독자 퀴즈 정답과 함께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애독자 QUIZ

문제 예산을 편성하기 전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주요 인사 등이 모여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로서, 정부는 이 회의를 통해 재정운용에 관한 보다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재정 재원 배분이 가능합니다. 2004년 이래 대통령 주재 하에 매년 개최해 왔으며, 올해로 21번째를 맞이하는 이 회의는?

답 | | | | | | | | |

지난 호 정답 : **결산검사**

지난 호 이벤트 당첨자

010-****-*306
010-****-*526
010-****-*422
010-****-*766
010-****-*519

애독자 퀴즈 정답 & 독자편지 보내주실 곳

★ 응모기간 2024.6.21.~7.12

QR 코드로 접속해
응모해 주세요.

법무부

해외에서
가볍게
대마 한 번?



돌아와서
무겁게
처벌됩니다!

대마를 흡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마를 수입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